www.kipf.re.kr

ISSN 2635-7127

CPEM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22년 여름(Vol. 9 No.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목 차

Ⅰ.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미국

- 대통령 관리 의제(PMA) 업데이트 ····· 03
- COVID-19: 구호 기금 감독 및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개선 필요
  부록 II: 보건복지부(HHS)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신규 고위험 영역 지정 ····· 07
- High-Risk Series: 고위험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 및 고위험 명단 제외 ····· 12

2. 캐나다

- 2022~2023 부처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발간 ····· 17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논의 ····· 19

3. 영국

- 그린북: 중앙정부 평가 ····· 20
- 2021년 정부 효율성 개선 ····· 26

4. 아일랜드

- 데이터 공유를 위한 DSGA 프레임워크 기반 데이터 공유 협정 ····· 30

5. 호주

-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 33
- 호주 정부 보조금 뉴스레터-2021년 12월호 ····· 39
- 보조금 허브 운영 ····· 43

6. 뉴질랜드

- 위험특성 평가 템플릿 2022 ····· 48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연구 동향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53
• 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56

2. 국외연구 동향

• 정부의 성과와 신뢰 연계에 대한 메타분석: 문화적, 방법론적 요인을 고려하여 ····· 60
•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종료를 부추기는 요인은 무엇인가? ····· 66

Ⅲ.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동향

• 조달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 75
•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 제공 ····· 81

2. 국외 동향

• 녹색 공공조달을 위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 89
•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94
• 국방 분야 중소기업 시행 계획 ····· 102

Ⅰ.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CONTENTS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아일랜드
5. 호주
6. 뉴질랜드

Ⅰ.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미국

대통령 관리 의제(PMA) 업데이트
Updates on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 2022. 2., 미국 performance.gov –

1. 검토 배경

- 2021년 11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연방 정부 건설을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인 바이든–해리스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가 발표됨
  - PMA는 대통령 관리 우선순위 실천을 위한 다단계·다년 계획임
  - PMA는 연방정부의 사업방식 개선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맞벌이 가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 관리 의제 발표 이후, 아래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있었음
  - (우선순위 1) 연방 인력 및 역량 강화
  - (우선순위 2) 우수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연방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 (우선순위 3)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사업관리에 관한 네 가지 즉각적인 조치 사례

- 미국 정부가 이룬 우선순위별 진전에 관하여 다음에서 살펴봄

2. PMA 우선순위 진전에 관한 네 가지 사례

가. 연방 인력 점검(우선순위 1)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역동성 및 헌신을 강조하였음

- PMA 발표에 앞서, 대통령 관리 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이하 PMC)는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 연방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과 함께 PMC로 대표되는 24개 기관의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범정부적(Government-wide) 설문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아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진행 중인 팬데믹에 대한 탐색 및 연방 직원의 물리적 작업 환경(physical workplaces)으로의 복귀
    2. 형평성과 포용성
    3. 직원들의 참여 및 피로(burnout)
  - 범정부적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 및 구성 요소별 결과는 성과포털(performance.gov) 사이트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향후 결과도 게시될 예정임[1)]
    - 위와 같은 설문조사는 연방 직원·관리자·기관 지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

나. 연방 고객 경험 분야 혁신(우선순위 2)

- 2021년 12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에 서명함
  - 바이든 대통령은 EO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미국 국민을 최우선시함을 보장
  - 연방 정부는 매일 수백만명의 미국인과 상호작용하며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국민들은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복잡한 정부 웹사이트를 탐색해야 함
  - E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이 국민을 정부 업무 중심에 두도록 함
    - 은퇴자 온라인 수당 청구, 안전한 온라인 여권 갱신, 건강 기록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 등 17개 연방 기관에 대한 36개의 고객 경험 개선을 지시함

1) https://www.performance.gov/blog/pulse-survey-1/, 검색일자: 2022. 5. 4.

- 이러한 연방 기관들의 조치는 우수한 연방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PMA의 두 번째 우선순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임

다. 조달을 통한 형평성 향상(우선순위 3)

- 2021년 12월 2일, 백악관은 연방 조달의 형평성 향상 및 소외된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
  - 중소약자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여성소유 소규모 기업(women-owned small businesses)·장애가 있는 전역군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service-disabled veteran owned small businesses)·낙후 사업 지역(Underutilized Business Zones)의 소규모 사업 계약자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조치가 이에 포함됨

- 또한 OMB는 중소기업청 및 연방 구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통령의 목표 이행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관리 조치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중소약자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 계약 규모를 5년에 걸쳐 추가로 1천억달러 증대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라.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PMA 학습 의제 개발

- 2021년 12월 21일, OMB는 증거기반 정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공동 노력의 결과물인 'PMA 학습 의제' 초안을 발표함
  - OMB는 1월 말 종료된 짧은 설문조사를 통해 PMA 학습 의제 개발을 위한 대중 의견을 취합함
  - 설문조사 결과는 최종 PMA 학습 의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학습 의제는 우선순위 질문을 식별하고, 증거 구축 활동(evidence-building activities)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2018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에서 요구하는 기관별 학습 의제를 개발함에 따라, PMA 학습 의제에는 정부 차원의 핵심 관리 질문(management questions)이 포함됨
  - PMA 학습 의제 초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학습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정부는 어떻게 미국 국민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가(노동력 강화 및 권한 부여를 중심으로)?

- 연방 정부는 어떻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 연방 정부는 어떻게 형평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가?

- PMA 학습 의제 개발은 우선순위 관리 질문과 관련된 증거를 구축할 것이며, 이는 여러 기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연방 정부의 학습문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내부·외부 연구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
  - 최종 PMA 학습 의제 및 기관 학습 의제는 올해 말 공개될 예정임

참고문헌

미국 성과포털, “Updates on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2022. 2. 17., https://www.performance.gov/blog/pma-february-update/, 검색일자: 2022. 4. 7.

미국 성과포털, “Federal Pulse Survey: Preliminary Insights From Our Pilot,” 2022. 1. 7., https://www.performance.gov/blog/pulse-survey-1/, 검색일자: 2022. 4. 7.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COVID-19: 구호 기금 감독 및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개선 필요
부록 Ⅱ: 보건복지부(HHS)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신규 고위험 영역 지정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for Overseeing Relief Funds and Leading Responses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ppendix Ⅱ: New High-Risk Designation: HH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 2022. 1., 미국 감사원(GAO) –

1. 검토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및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8월 31일부로 「CARES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포함한 6개의 구제법이 제정됨
  - 「CARES법」에는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노력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 본 자료는 코로나19 관련 제9차 종합보고서로, GAO는 본 자료를 통해 전염병 및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신규 권고사항을 제시함
  - 또한 해당 자료의 부록Ⅱ에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의 리더십을 고위험 영역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음을 설명함
    - GAO는 코로나19 및 기타 전염병, 허리케인 등의 기후 문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고위험 영역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음을 설명함

2.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 결과

- 미국의 경우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38만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1년 여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시 일일 확진자 수를 상회하는 수준임

-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건수 역시 2021년 11월 말 일평균 5만건에서 2021년 말 9만 3천건으로 약 2배 증가함

■ C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3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6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지난 2021년 말 5~11세 어린이용 백신 및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 부스터샷 허가 등 다각도로 코로나19 백신의 적격성을 확대함
- 또한,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음

■ GAO의 코로나19 보고서는 팬데믹 대응 및 미국인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 개선을 위한 총 24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해왔음

- 연방기관들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8%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
  - 16%(40개)를 완전히 이행, 22%(54개)를 부분적으로 이행
- 또한 GAO는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네 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세 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3. GAO의 다섯 가지 신규 권고사항

■ GAO는 본 보고서에서 긴급 임대 지원, 영양 지원 및 세금 감면 분야와 관련된 다섯 가지 새로운 권고사항을 제시함

가. 긴급 임대 지원

■ 2021년 11월 30일 기준 재무부는 긴급 임대 지원(Emergency Rental Assistance, 이하 ERA)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465억 5천만달러 중 약 380억달러를 지출함

- ERA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재무부는 아직 ERA 관련 사후 지급 검토·복구 감사와 같은 수혜자의 초과지급금을 확인 및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지 않은 상태임
  - 사후 지급 검토·복구 감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ERA 지급의 적격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사후 지급 검토·복구 감사 절차가 없으면 수혜자가 초과 지급한 금액을

식별 및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권고사항 1) 이에 GAO는 ERA 프로그램 수혜자가 임대인 또는 유틸리티 제공업체에 초과 지급한 금액을 적시에 확인·회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재무부 주도로 설계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함

■ 한편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 준수를 위해 감사수행 관련 지침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OMB는 2021년 규정준수 보고서(Compliance Supplement)에서 ERA 프로그램을 고위험(higher risk)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지만, ERA 준수를 감사하는 지침은 포함하지 않음
- (권고사항 2) 이에 GAO는 OMB가 규정준수 보고서(Compliance Supplement)의 단일감사에 대한 ERA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적시에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사관이 식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함

나. 영양 지원

■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이하 FNS)은 코로나19로 인해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팬데믹 전자지원금(Pandem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이하 EBT)' 프로그램,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영양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FNS는 비상시의 영양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농무부가 NFS 프로그램의 비상사태 대응전략을 개발한다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나 미래의 비상사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임
- (권고사항 3) 이에 GAO는 FN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습한 교훈과 전략을 주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또한 FNS는 주 및 지역 기관이 팬데믹 EBT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였음

- 주정부의 영양 지원 사업 관련 기관이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모든 적격 학생에게 올바른 금액의 팬데믹 EBT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권고사항 4) 이에 GAO는 FNS가 적격성 및 수당 금액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주 및 지역 기관이 적격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함

다.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 「CARES법」 및 기타 코로나19 구제법에는 특정 납세 의무를 줄여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현금 환급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조세 조치에는 당기순손실의 소급이월 확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이하 AMT) 신용환불(credit refund)의 신속한 처리 등이 포함됨
    -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의 소급 이월, AMT 신용환불을 포함하는 이월환급금(carryback refunds) 신청이 전년(2021년) 대비 276% 증가함
  -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에서는 기업이 IRS 양식 1045 및 1139를 통해 제출하는 환급 신청 처리에 업무 지연 발생
    -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90일 이내에 특정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1년 11월 기준 국세청이 모든 이월 환급금을 처리하는 데 평균적으로 165일이 소요됨
  - (권고사항 5) 이에 GAO는 국세청이 90일 법적 요건 내에서 양식 1045와 1139의 잠정적 환급(tentative refunds) 신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4. 보건복지부(HHS) 리더십의 신규 고위험 영역 지정

- GAO는 다양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 및 대비를 위한 HHS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대해 10년 이상 보고해왔으며, 이 역할을 수행하는 HHS의 능력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발견함
  - 이러한 결함은 코로나19, 신종 인플루엔자, 지카, 에볼라 등의 전염병 및 허리케인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저해함
  - 광범위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게 될 것임

- HHS는 GAO가 2007년부터 제시해온 리더십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 관련 115개의 권장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72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GAO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HHS 대응 및 대비 능력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음을 식별함
  - 연방·주·지방·부족·지역 및 비정부 파트너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책임 설정
  - 의사 결정과 정보 제공을 위한 일관된·완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주요 파트너 및 대중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제공

- 사업의 무결성(integrity) 보장, 대중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책임성 확립
- 주요 파트너들의 역량 및 한계에 대한 이해

■ HHS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행정부 및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HHS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GAO는 해당 영역을 고위험(High risk) 분야에 추가하고자 함

참고문헌

미국 GAO, "COVID-19: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for Overseeing Relief Funds and Leading Responses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2022. 1. 27.,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291, 검색일자: 2022. 4. 7.

미국 GAO, "COVID-19: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for Overseeing Relief Funds and Leading Responses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ppendix II: New High-Risk Designation: HH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2022. 1. 27., https://files.gao.gov/reports/GAO-22-105291/index.html#appendix18, 검색일자: 2022. 4. 7.

미국 GAO, "High Risk List," 2022. 3. 3., https://www.gao.gov/high-risk-list, 검색일자: 2022. 5. 11.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High-Risk Series: 고위험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 및 고위험 명단 제외

Key Practices to Successfully Address High-Risk Areas and Remove Them from the List

– 2022. 3., 미국 감사원(GAO) –

1. 검토배경

-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은 부정부패·낭비·남용·관리부실 등에 취약하거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2년마다 '고위험 사업분야(High-Risk List)'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프로그램 개선 및 재정 절감을 위해 연방 기관이 조치를 취한 선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고위험 문제 해결 및 고위험 명단 제외 사례

- GAO는 고위험 명단 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5개로 두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위험 사업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함
  - 리더십(Leadership commitment): 담당 기관은 강한 공약 이행 의지와 리더십 지원을 증명해야 함
  - 역량(Capacity): 담당 기관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인력 및 자원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실행계획(Action plan): 담당 기관은 문제 사업의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GAO가 권장하는 실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함
  - 모니터링(Monitoring): 담당 기관은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입증된 추진 현황(Demonstrated progress): 담당 기관은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고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본 장에서는 위의 5개 영역에 기반하여 고위험 영역 문제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 및 고위험 명단 제외 사례를 살펴봄

가. 리더십(Leadership commitment) 관련 사례

- (1) 9.11 테러 이후, 용이한 테러 정보 공유를 위해 대통령이 정보 공유 환경(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이하 ISE)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제정됨
  - 기관 지도자들은 ISE를 통해 연방, 주, 지방, 부족, 국제 및 민간 부문 파트너 간 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절차·기술을 마련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하였으며, 5억 3,100만달러의 재정을 절감하여 2017년 해당 분야가 고위험 명단에서 제외됨

- (2) 초과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연방 자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개혁안에 서명하였으며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기관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전략적 체계를 개발
  - 이러한 노력으로 임대료가 인하되었으며, 2011년과 2021년 해당 분야의 고위험 범위가 축소됨
    - 2023년까지 약 36억달러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임대료 회피에 따른 비용(lease cost avoidances)이 47억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나. 역량(Capacity) 관련 사례

-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의회는 저축 및 대부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989년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이하 RTC)를 설립하여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을 처분함
  - 그 후 의회는 RTC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 개혁을 의무화하였으며, RTC의 업무·인력 및 운영을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로 이관하기 위한 기관 간 전환 태스크 포스(transition task force)를 설립함
  - 관리개선을 통해 RTC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5년 해당 영역이 고위험 명단에서 제외됨

다. 실행계획(Action plan) 관련 사례

- (1) OMB는 기관 간 계약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GAO가 식별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배치함
  - 근본 원인으로는 기관 간 계약 관리자와 정부 고객(government customers)에 대한 불분명한 역할 및 책임, 취약한 내부 통제, 불충분한 인사 교육이 있음
  - 의회는 관리 통제와 기관 보고 요건 설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 50억달러의 재정이 절감되어 2013년 해당 분야가 고위험 영역에서 제외됨

- (2) OMB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의 계약 및 프로젝트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DOE가 국가핵보안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및 환경관리국(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EM)을 위한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함
  - 이러한 DOE의 노력으로 약 145억달러의 재정절감 및 감독 강화효과가 있었으며, 2009년 및 2013년 해당 영역의 고위험 범위가 축소됨

라. 모니터링(Monitoring) 관련 사례

- 의회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이하 DOD)의 공급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위치정보(asset visibility) 감독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DOD가 제출하도록 함
  - 이후 국방부의 지도자들은 상세한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 감독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06~2019년 약 37억달러의 재정을 절감하였으며, 2019년에 해당 영역이 고위험 목록에서 제외됨

마. 입증된 추진 현황(Demonstrated progress)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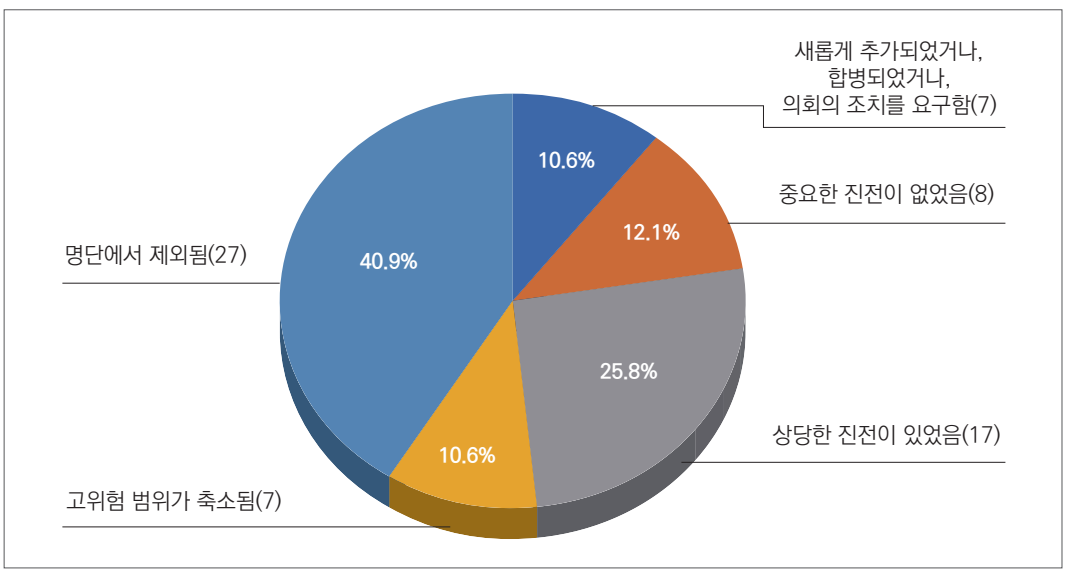
- (1) DOD는 과도한 기반시설(excess infrastructure)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지원 기반시설(support infrastructure) 및 임대 사용을 줄이고, 설치계약서(installation agreements) 품질을 향상시킴
  - 그 결과 2016년 정부 전체 사무실 및 창고 규모 축소분 중 국방부가 6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재산의 경우 75%를 차지함
  - 이에 GAO는 2021년 해당 영역을 고위험 목록에서 제외함

- (2) 의회는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BIF)이 직면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재조성하고 기업지배구조·규제 및 회계 관행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함
  - 그 결과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해당 기금의 준비금을 재조성하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은행 파산 및 보험 손실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이에 GAO는 1995년 해당 영역을 고위험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후 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이 파산 은행의 예금자, 보험 가입 예금자 등을 보호해왔음

- [그림 1]과 같이 대부분의 고위험 영역(약 52%)은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그 범위가 축소됨
  - 기타 영역들의 경우 위의 다섯 가지 제외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다른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

[그림 1] GAO 고위험 목록 처리 현황(1990~2021년)

(단위: 건, %)



자료: 미국 GAO, "HIGH-RISK SERIES: Key Practices to Successfully Address High-Risk Areas and Remove Them from the List," https://www.gao.gov/assets/gao-22-105184.pdf, 1990~2021년 GAO 고위험 목록 처리 현황, 검색일자: 2022. 4. 7.

참고문헌

미국 GAO, “High-Risk Series: Key Practices to Successfully Address High-Risk Areas and Remove Them from the List,” 2022. 3. 13.,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184, 검색일자: 2022. 4. 7.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2. 캐나다

2022~2023 부처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발간

(2022-23 Departmental Plans & Main Estimates)

– 2022. 3., 재정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 캐나다 정부의 예산서는 정부의 지출계획(The Government Expenditure Plan)과 부처의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설명된 예산요구서(The Main Estimated), 그리고 부처별 지출계획(Departmental Expenditure Plans)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처별 지출계획은 부처별 결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sm, DRR)와 부처별 사업계획서(Departmental Plans, DP)를 포함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캐나다 재정위원회 사무국은 '캐나다 정부 인포베이스(GC InfoBase)'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각 부처의 성과측정 결과 및 성과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2022~2023 부처별 사업계획서 및 2022~2023 예산요구서 요약본을 발표하였음

- 2022~2023년 부처별 사업계획서에서는 89개의 부처가 1,529개의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성과측정을 위해 2,779개의 지표를 사용할 것임. 또한, 결과보고서는 2023년 가을에 발표할 예정임
  - 부처별 사업계획서는 부처들이 목표 대비 성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별 우선순위, 성과목표, 요구사항, 예산 추정치, 측정지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2~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서에는 126개의 정부기관이 국민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3,976억달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음
  - GC infoBase에서는 2022~2023년 예산요구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2022~2023년 예산 요구액, 2021~2022년 대비 증가한 예산액 비율)를 부처별 및 항목별로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results/.-.-(panel_key.-.-'gov_dp), 검색일자 2022. 4. 20.

GC infoBase,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news/2022/03/treasury-board-president-mona-fortier-tables-2022-23-main-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 4. 20.

GC infoBase,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news/2022/03/treasury-board-president-mona-fortier-tables-departmental-plans-for-the-2022-23-fiscal-year.html, 검색일자 2022. 4. 20.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논의

(Government launches budget consultations to hear from Canadians)
– 2022. 1.,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DFC) –

-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월 31일 국가 예산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LetTalkBudget 2022.ca 사이트를 2022년 2월 25일까지 운영하였음
  - LetTalkBudget2022.ca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커뮤니티, 지역, 산업 등 다양한 그룹에 속하는 국민과 함께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경기회복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함

-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2019년 2월부터 국민은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창구인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광화문1번가의 혁신제안톡을 사용하여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구체화, 채택 과제 고도화 단계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됨
    – 2022년 4월 기준 1만 4,062건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90건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었음

참고자료

GC infoBas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01/government-launches-budget-consultations-to-hear-from-canadians.html, 검색일자 2022. 4. 20.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3. 영국

그린북: 중앙정부 평가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 2022. 3. 30.,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1. 개요

- 그린북(The Green Book)은 영국 재무부에서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정책의 이행 전후 및 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의 설계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는 2단계 과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정책 후보(option) 목록(longlist)과 최종 평가 목록(shortlist)을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이하 CBA)을 이용한 최종 리스트 분석 또는 사회적 비용 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이하 CEA)을 수행함
  - 그린북 지침은 정책결정자부터 분석가까지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참고 그린북의 구성

◆ 제1~3장 개략적인 개요
- 제1장 그린북 소개
- 제2장 평가에 관한 비기술적 소개(non-technical introduction)
- 제3장 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평가의 적합성

◆ 제4~8장 실무자를 위한 세부정보
- 제4장 정책 후보(옵션) 목록의 평가
- 제5장 사회적 비용 · 편익 및 비용 효과성 접근법의 활용 등
- 제6장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 방법
- 제7장 평가 결과의 공개
- 제8장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접근법

◆ 부록 1~7장 기술적 평가정보 및 정부 전반의 평가에 관한 추가 내용

- 이 지침은 중앙정부의 장관 및 공무원 등 정책결정자에게 객관적인 조언이 될 수 있으며, 분석, 조달, 상업 및 금융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자료로 활용됨
  - 그린북은 기계적이거나 결정론적 의사결정 지침이 아니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비용, 편익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그린북 지침의 범위는 〈표 1〉과 같으며, 공공지출, 세금, 규제 변경, 기존 공공자산 변경 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적용됨

〈표 1〉 그린북 지침의 범위(Scope of Green Book Guidance)

- 주요 프로젝트(major projects)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policy and programme development)
- 공공지출에 관한 모든 계획안(all proposals concerning public spending)
- 입법 또는 규제안(legislative or regulatory proposals)
- 주요 공공조달 계획안(significant public procurement proposals)
- 금융자산 등 기존 정부자산의 판매 및 사용(sale or use of existing government assets –including financial assets)
- 기존 공공자산 및 자원 사용의 변경(changes to the use of existing public assets and resources)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평가(appraisal of a portfolio of programmes and projects)
- 정부 조직의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s in government organisations)
- 세금 및 복지 계획안(taxation and benefit proposals)

2. 평가의 원칙

- 평가(Appraisal)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의 비용, 편익 및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임
  -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옵션의 잠재적 효과 및 전반적인 영향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공공가치(public value) 또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대한 평가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원리와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시장경제의 효율이 아닌 사회 전체의 후생 효율에 관한 것임
  -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 문화, 보건, 사회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평가의 주요 단계에 대한 요약은 〈표 2〉와 같음

〈표 2〉 주요 평가 단계 요약(Summary Outline of Key Appraisal Steps)

- 평가 대상의 정의
  - '전략적 평가 및 사례 발굴(the Strategic Assessment and Making the Case for Change)'을 통해, 현재 상황과 비즈니스를 평상시와 같이 수치화하고(the present situation and Business as Usual, 이하 the BAU) 'SMART 목표(SMART objectives)'를 파악함
  - SMART 목표는 Specific(특정할 수 있고), Measurable(측정 가능하며), Achievable(달성 가능하고), Realistic(현실적이면서), Time-limited(시간제한이 있어야 함)을 뜻함
- 정책 후보 목록과 최종 평가 목록의 분석(Longlist and shortlist analysis)
  - 옵션 프레임워크 필터(the options framework filter)를 사용한 정책 평가 목록 분석(longlist analysis)은 SMART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됨
  - 편향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가능성을 두고 최종 옵션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지출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작업임
- 최종 평가 목록에 대한 예상 비용·편익 추정
  - 세부 평가의 핵심이 되는 최종 평가 목록의 분석은 다섯 가지 사례 모델의 전략적, 상업적, 재무적 관리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CBA) 또는 사회적 비용 효과 분석(CEA)을 통해 비용·편익 분석의 수단으로 활용됨
- 선호 옵션의 파악
  - 최종 후보 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비용, 편익, 위험 및 지출가치를 최적화하는 옵션을 결정함
- 모니터링 및 평가(Evaluation)
  -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이행 전후와 그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개입과 정책 설계, 이행 및 그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함

3. 정책 후보(옵션) 목록의 평가

[1] 옵션 설정 및 정책 후보 목록의 평가(Generating Options and longlist appraisal)

- 정책 제안(Proposals)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함
  - 최종 후보 목록의 분석(Longlist analysis)은 연구 결과 및 전문가의 조언, 이해관계자의 지식을 종합하여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이행 방법 및 설계과정, 문제해결 방법 등을 평가하는 과정임
  - 이 목록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향후 장기 평가 목록의 핵심 부분으로 상호 참조되어야 함

[2] 최종 평가 목록(Shortlist appraisal)

- 최종 평가 목록(Shortlist appraisal) 단계에서는 위험관리비용을 포함한 정부 개입의 예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안이 되는 옵션 간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CBA)을, 옵션 간 측정 가능한 사회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 효과 분석(CEA)을 실시함
- 비용과 편익은 공공부문이나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영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함
  - 새로운 규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도 사회, 장소, 기업 등 특정 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룹 또는 장소에 걸쳐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함
  - 나아가 분석된 비용과 편익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되고 수익화되어야 함

■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평가 기법이 권장됨
-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 및 환경적 가치와 같은 편익이 포함되며,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정책 후보 목록을 선정할 때에 정량화되지 않은 비화폐성 가치(unmonetisable values)의 처리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야 함
- 도로, 철도 및 건축과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의 비용 및 편익은 그 제안서에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60년 이상에 걸쳐 평가됨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은 30년, 행정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10년의 기간에 걸쳐 평가하며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을 책정함
  -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나 핵 폐기물 보관과 같이 60년 이상의 기간 및 상당한 비용과 편익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적절한 평가기간을 재무부와 논의하여 공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3] 분배 분석(Distributional analysis)

■ 제안된 정책으로 인해 영국 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상당한 재분배 효과가 예상될 경우, 분배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이 분석에 사용된 세부 사항 및 복잡성의 수준은 정책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례해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 가능한 복잡성 수준 중 하나는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경우: 선임책임자(Senior Responsible Owner, SRO)의 판단 및 승인이 필요함
  - 재분배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하고 정량화된 분석 결과가 필요함

- 재분배 및 사회복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균등화 소득 접근법(equivalised income approach)을 채택하여 가중치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함

[4] 낙관적 편향, 위험 및 민감도 분석(Optimism bias, risk and sensitivity analysis)

- 정책 평가 시 낙관적 편향, 위험 그리고 민감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해야 함
  - 낙관적 편향이란, 평가자가 자본 비용 등 운영 비용, 프로젝트 기간, 결과적인 편익의 집행 등을 포함한 주요 매개변수에 대해 낙관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함
    - 현실적인 예측보다 낙관적인 예측은 달성 불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제도적 실패를 초래함
    -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안된 정책에 낙관적 편향 수준을 비례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그린북이 권장하는 초기 낙관적 편향 수준을 채택하여 위험의 관리, 회피, 공유 및 완화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제안된 정책의 설계, 이행, 실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비용과 그 위험을 회피, 공유 또는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구체화해야 함
    - 단순히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정부구매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사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주요 변수의 잠재적 변동에 대한 예상 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도 요구됨

4. 평가 결과의 공개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정책의 이행 전과 후, 그 과정 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임
  - SMART 목표 설정이 현실적이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이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의 설계, 이행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예상된 효과가 실현되었는지, △비용과 편익이 예상과 맞는지,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변화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등을 테스트함
  -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정책의 개선과 학습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모든 정책 제안은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법적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정책의 이행 전후와 전체 기간에 적용됨

참고자료

GOV.UK, HM Treasury and Government Finance Function,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2022. 3. 3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reen-book-appraisal-and-evaluation-in-central-governent, 검색일자: 2022. 4. 14.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2021년 정부 효율성 개선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 2022. 3. 28., 영국 감사원(NAO) –

1. 개요

- 정부는 '정부 개혁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Government Reform)에서, 납세자의 지출 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출 감독 및 부처 간 기능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
  - 영국 정부는 2020–2021회계연도에 정부지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제공해왔으며, 각 부처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현금성 저축(cashable savings), 즉 예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2020~2021년 동안 절감한 예산(현금성 저축)은 총 34억파운드에 달했는데, 그중 약 19억파운드는 정부 사기·오류 대응, 부채 관리 개선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손실 감소분, 약 14억파운드는 정부거래 관련 예산에서, 약 1억 4천만파운드는 디지털·데이터 지원 관련 예산에서 각각 절감하였음
    - 모든 절감액은 감사원에 의해 정확성과 강건성(robustness)을 보증받은 수치이며, 이하에서는 세부적인 예산 절감 사례를 소개함

〈표 1〉 2020~2021년도 정부 효율성 개선에 따른 팀별 예산 절감 요약

기능(팀) (Function, team)	내용 (Team activity)	2021/21 절감액(£)
정부 사기 대응 기능 (Government Counter Fraud function)	- 정부 사기 대응 기능팀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하기 위해 1만 6천 여명의 공무원들이 상주함 - 각 기관 내부의 사기 위험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부처와, 경제범죄에 대응하는 부처로 나뉨	13억 8,800만파운드 (£1.388 billion)
정부 부채 관리 (Government Debt Management)	- 정부채무관리팀에서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통상적인 부채 수준을 유지·관리함	4억 4,100만파운드 (£441 million)
정부 보조금 관리 기능 (Government Grants Management function)	- 정부 보조금 관리 기능팀은 정부부처 전반의 보조금 및 기금 정책의 효과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3,400만파운드 (£34 million)

〈표 1〉의 계속

기능(팀) (Function, team)	내용 (Team activity)	2021/21 절감액(£)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기능 (표준 및 보증 팀) (Digital, Data and Technology function(Standards and Assurance team))	- 표준보증팀의 목표는 디지털 및 기술에 대한 정부지출이 관련 법과 관행, 서비스 표준 그리고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도록 하여, 각 부처가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1억 4,200만파운드 (£142 million)
상업기능(복합단지 거래팀) (Commercial function (Complex Transactions team))	- 상업기능팀 중 복합단지거래팀은 각 부처에 직접적으로 상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11억 9,100만파운드 (£1.191 billion)
상업기능(시장 및 공급업체팀) (Commercial function(Markets and Suppliers team))	- 상업기능팀 중 시장 및 공급업체팀은 40개의 전략적 공급업체로부터 정부에 조달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2억 1,200만파운드 (£212 million)
합계		34억 8천만파운드 (£3.408 billion)

2. 정부 효율성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사례

[1] 사기, 부채 및 보조금 대응(Counter Fraud, Debt and Grants)

- 정부 사기 대응 기능, 정부 부채 관리 기능 및 정부 보조금 관리 기능은 영국 재무부 등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여 사기 및 오류에 의한 재정적 손실을 절감, 채무의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정부 사기 대응 기능팀에서 절감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을 사전에 탐지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재분배하고 데이터 매칭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됨

[2]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Digital, Data and Technology)

- 중앙 디지털 데이터부(The Central Digital and Data Office, 이하 CDDO)는 각 부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CDDO는 IT 서비스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내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1억 4,200만파운드의 예산 절감을 달성함
  - 이 수치는 환경식품농림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이하 DEFRA)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식 ICT 서비스인 '통합프로그램(the Unity programme)' 활용으로 절감한 1억 3,800만파운드를 포함한 수치이며, 기존 ICT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모델로 이동하는 작업이 포함된 금액임

[3] 상업(Commercial)

- 정부의 상업기능은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을 지원하고, 각 부처에 인력, 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 간 네트워크 기능을 포괄함
  - 2020~2021년 상업기능 중 공급망 조정 유한회사 지원 기능 등을 통해 약 14억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절감 효과는 복합단지 및 공급망 구축 등 정부거래 관리 개선으로 이어져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절감을 실현함

[4] 분석(Analysis)

- 분석기능팀(The Analysis function)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간 네트워크(cross-government network)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품질의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함
  - 혁신적인 분석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회복력을 개선함
  - 예컨대 교육부에서는 '재생가능한 분석 파이프라인(Reproducible Analytical Pipelines, 이하 RAP)'을 통해 비효율적인 수동 프로세스(manual processes)를 제거하고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 통계 분석에 중요한 역할로 활용함

[5] 감사되지 않은 광범위한 편익(Unaudited wider benefits)

-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질적 향상이나, 잠재적인 지출을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노력 등은 수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총 34억파운드에 달하는 예산 절감액은 실제 예산 절감 효과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편익과 관련된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음

    * 법무부, 법무장관실 등 연례 보고서 및 계정(Government Legal Department, Attorney General's Office and HM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Annual Report and Account), 부동산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Estate Report), 정부 재산 관련 연례 보고서 및 계정(Government Property Agency Annual Report and Accounts) 등

참고자료

GOV.UK, Cabinet Office, The Rt Hon Jacob Rees-Mogg MP, and Lord True CBE,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2022. 3. 2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efficiency-savings-2021, 검색일자: 2022. 4. 15.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4. 아일랜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DSGA 프레임워크 기반 데이터 공유 협정

(Public consultation for Data Sharing Agreements under the DSGA Framework for sharing data)

– 2022. 2. 10.,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1. 개요

- 아일랜드는 정부정책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을 중요시하고 있음

- 2019년에 도입된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The Data Sharing and Governance Act 2019, 이하 DSGA)'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공유 체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어냄
  - 이어 '2019~2023년 공공서비스 데이터 전략(The Public Service Data Strategy 2019-2023)'을 제시하며, 관련 법 시행 및 공공서비스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관련 계획을 발표함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산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The Data Governance Board)'는 공공서비스 데이터 전략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도입하고,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에게 정책 제언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음
  - 초기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의 데이터를 법률에 따라 공유하기 위해 '신(新) DSGA 프레임워크(the new DSGA Framework)'로 공공서비스를 이동시키는 것에 있었음
    - 이 프레임워크는 DSGA 2019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데이터 공유 관련 법적 근거와 관행을 규정한 것임

- 이하에서는 법무부와 국세청, 외무부 간의 데이터 공유 협정 사례를 소개함

2. 데이터 공유 협정(Data Sharing Agreement) 사례

[1] 법무부와 국세청 간 이민 투자자 관련 데이터 공유 협정(Data Sharing Agreement, 이하 DSA)

- 법무부는 2019년 도입된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DSGA)'에 따라 이민 투자자(Immigration Investor) 데이터 공유를 위해 국세청(the 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과 데이터 공유 협정(Data Sharing Agreement, 이하 DSA)을 체결할 예정임
  -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rogramme, 이하 IIP)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장기간 투자하여 아일랜드로의 이민 허가를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함
  - IIP 신청자의 데이터는 국세청 정보교환지부(Exchange of Information branch)에 공유되고 관련 국세청 부서로 교환됨
  - 국세청은 향후 해당 데이터를 이관할 시, OECD 공동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에 따라 IIP 신청자들의 과세기준지(tax residence)의 관할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아일랜드가 책무를 이행하도록 함

[2] 법무부와 외무부 간 시민권 데이터 공유 협정(DSA)

- 법무부는 마찬가지로 DSGA에 따라 시민권 데이터(Citizenship data) 공유를 위해 외무부(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와 데이터 공유 협정(DSA)을 체결할 예정임
  -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귀화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 증명서에 근거하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시민권 취득 및 여권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제공된 해당 정보는 추후 귀화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에도 활용될 수 있음

참고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Public consultation for Data Sharing Agreements under the DSGA Framework for sharing data*, 2022. 2. 10., https://www.gov.ie/en/publication/6761b-public-consultation-for-data-sharing-agreements-under-the-dsga-framework-for-sharing-data/, 검색일자: 2022. 4. 13.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5. 호주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Newsletter, No. 76; 77; 78 –
– 2022. 1.~3.,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1. 재무장관 지침 개정 및 신규 RMG(Amended Finance Secretary Direction and a new RMG)

- 재무부장관 지침 개정 –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에 포함된 성과정보 요구사항을 개정함
  - 「PGPA법」 제36(3)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침으로 PGPA 규칙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2월 8일에 개정, 2022-23년 예산부터 적용됨
  - 성과계획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개정된 사항
    - 지침의 용어를 PGPA 규칙에 사용된 용어와 통일
    - PGPA 규칙에 명시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예산보고서상 보고사항과도 부합시킴
    - 현재 성과계획에 나타난 각 프로그램의 연관성 가운데 주요 활동을 보고하여 성과계획과 연계를 개선시킴
  - 기관들이 PGPA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RMG를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함
    - RMG-129: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에 성과정보 보고
    - RMG는 매년 발표되는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 지침과 같이 이용

2. 영연방 평가 정책

- 신규 영연방 평가 정책은 2021년 12월 1일에 시행되며, 해당 정책은 툴킷(RMG-130)으로 지원됨
  - 재무부 웹사이트에 정책의 목적과 툴킷(RMG-130) 이용 방법을 담은 짧은 동영상 2편을 게재함
    - 평가 정책 동영상(Evaluation Policy Video): 정책이 개발된 방법과 이유, 달성 목표 등을 다룸

- 평가 툴킷 동영상(Evaluation Toolkit Video): 도구 키트에 대한 개요와 정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
- 영연방 평가 정책
- 영연방 평가 툴킷(RMG-130)

– 재무부는 호주공공서비스(APS) Academy와 협력하여 2월부터 새로운 평가 정책 및 툴킷에 대한 일반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임
-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모든 세션 정보는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APSC) 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어떤 세션이든 등록 가능(apsacademy.gov.au 로그인 필요)
- 이벤트 세부정보는 메뉴(Catalogue menu) 또는 검색필드에 "평가"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음

– 또한, 재무부는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형 세션을 제공함

3. RMG-132, RMG-133 업데이트

■ 성과 프레임워크 RMG-132, RMG-133이 개선되었으며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함

● 해당 RMG는 성과 계획을 준비하고 게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우선 접근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개선됨

– RMG-132: 영연방 기관을 위한 성과 계획

– RMG-133: 영연방 회사를 위한 성과 계획

● 또한, 규제기관이나 규제기능이 있는 기관을 위한 새로운 분류세션을 만들어 관련 성과보고서(Statements of Expectations)와 지출계획(Statements of Intent) 간 통합이나 규제원칙의 실행 등을 논의함

4. 2020-21년 디지털 연간 보고 피드백

■ 2020-21년 기간에 대한 디지털연례보고(DIgital Annual Reporting) 피드백 요청이 2022년 1월 29일 금요일 마감됨

● 연례보고서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에게 2021-22년 보고기간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요청함

– 피드백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며, 피드백 제공에는 약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임

5.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 업데이트

- 재무부는 2021년 하반기,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기관 간 경영진별 운영위원회가 검토를 감독하고 다음 권고안을 확인
    - 위험관리 요구사항, 지침 및 이니셔티브 등을 종합하여 「PGPA법」 섹션16에 따른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전체의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영연방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권고
    - 최고위험책임자로 구성된 최고운영책임자(COO)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 전체에 걸쳐 상당한 공유, 누적 및 신흥 위험을 고려할 것을 권고
    - 재무부, 수상 및 내각부,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호주공공서비스 전반의 위험문화 개선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권고
    -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
      - 통제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표현 및 요구사항 등을 통합해 알기 쉽게 함
      - 주요 위험 책임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함
      -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요소를 포함함
  - 재무부는 현재 영연방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권장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임

6. 플립차트 변경사항 – 2022년 3월 2일

- 2022년 3월 2일, 새로운 플립차트와 영연방 기관들의 목록이 발표됨
  - 플립차트와 기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됨
    - "Moorebank Intermodal Company Limited"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외로 회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National Intermodal Corporation Limited"로 이름을 변경함
    -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기관 명칭과 일치하도록 "프로페셔널 서비스 검토 계획"의 항목을 수정함
  - 또한, 플립차트에서 상징키의 해당 기호를 1999년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네 개 의회 부서에 추가함
    - 의회 네 개 부처의 직원은 1999년 「의회서비스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맺고 있음
  -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22 플립차트 변경사항 표를 참조

7. 2021-2022 보고기간 - 디지털 연간 보고 도구

- 재무부는 2022년 4월 초, 2021-22년 연례보고서 프로세스를 위해 디지털 연간 보고 도구에 대한 모든 기관들의 접속 권한 확립을 노력 중임
  - 2020-21 연례보고서 프로세스에서 기존 개별사용자에 대한 접속 권한, 보고서 머릿글 구조 등은 별다른 통지가 없는 한 해당 기관별로 자동이월(roll out)됨
    - 접속 권한이 설정되면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 및 보고서 구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2021-22년 기간에 대한 기존 사용자 정보의 자동이월 이전에 세부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문의·안내는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모든 디지털 연례 보고서상의 이메일로 전송됨
    - 2022년 4월 초까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변경 요청은 늦어도 2022년 3월 10일 COB 목요일까지 팀에 제공되어야 함

8. 연간 성과보고서 RMG-134 업데이트

- 영연방 기관들을 위한 개정된 RMG-134(연간 성과보고서)는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함
  - 해당 RMG는 성과계획서를 준비하고 게시할 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우선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개선됨
    - 연간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음

9. 영연방 부정수급방지 센터 자원

- 영연방 부정수급방지센터(Commonwealth Fraud Prevention Center)는 호주 정부 기관이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침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존의 실용적인 제품을 개선함
  - 최근 새로운 사례와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위험평가 지침을 검토하여 지침 및 도구의 최신 버전을 공개함
    - 부정수급 위험평가 선도적 실무 지침: 해당 가이드에서는 호주 정부 전반의 부정행위 위험평가 관행에서 도출된 원칙과 방법을 위험관리 및 부정수급 적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
    - 부정수급 위험평가 템플릿: 부정수급 위험에 대해 운영수준·세부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기록·접근·평가할 수 있음
    - 전략적 부정수급 위험 프로파일링 도구: 이 도구는 호주 정부 관계자가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부분을 식별하여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센터는 또한 최근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신 국제 공공부문 부정수급 포럼(이하 IPSFF)에서 "압력 테스트 가이드(A Guide to Pressure Testing)"라는 간행물을 발표함
  - 이 가이드는 공무원들이 압력 테스트가 무엇인지, 부정수급 위험을 관리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에서 압력 테스트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안됨
  - IPSFF 회원국이 개발한 선도적인 압력 테스트 관행, 프레임워크 및 사례 연구를 통합하여 영연방 기관이 부정수급 통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에 앞서 시의적절한 지침임
- 업데이트된 정책은 영연방 기관들이 통제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10. 컴커버(Comcover)-교육

- 2022년 컴커버의 위험 교육 프로그램(risk education program)은 호주 공공서비스 부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수준으로 개설됨
  - (기초) 모든 연방 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담당하는 모든 호주연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관계자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가) 기관의 위험관리체계 설계 및 담당 직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위 공무원) 경영진(Senior executive)을 대상으로 주요 위험관리 및 새로운 위험관리 이슈를 인식하고 연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반의 긍정적인 위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과정(※ 2022년 상반기 워크숍 일정)
    - 일반직원: 실질적 위험관리(2. 16.~17., 3. 27.~28., ※ 온라인 3. 22., 6. 15.)
    - 전문가: 내재된 위험관리(6. 7.~8.)
    - 고위 공무원: 위험관리에 대한 전략적 관점(2. 22., 6. 16., ※ 온라인 3. 9., 5. 31.)

참고자료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76,” 2022. 1. 14.,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6, 검색일자: 2022. 5. 25.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77,” 2022. 3. 4.,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7, 검색일자: 2022. 5. 25.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호주 정부 보조금 뉴스레터 – 2021년 12월호

(Australian Government Grants News)
– December 2021 Edition –
– 2021. 12.,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1. JCPAA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Government response to JCPAA Report 484)

- 공공 회계 및 감사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ic Accounts and Audit, 이하 JCPAA) 보고서는 보조금 관리가 정부지출 관리의 핵심이며, 위원회가 모니터링에 계속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지적함
  - 2021년 10월 21일, JCPAA 보고서에 정부 보조금 관리(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s and Audit)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검토됨
  - 정부는 6개의 JCAPAA 권장사항에 동의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관리, 성과, 책임성(PGPA) 규칙 및 영연방 보조금 규칙·지침(CGRGs) 2017에 따른 기존 조항이 이미 일부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JCPAA 권고사항을 이행 중임
      - 보조금 지침 준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보조금 기회에 대한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규칙·지침(CGRG)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
      - 요구사항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모범사례 제공을 위해 지침을 통합·수정
      - 보조금 기준 지침과 관련된 보고 및 준수 시스템 검토
        ※ 결과를 공공 회계 및 감사 합동 위원회에 재검토
    - 또한, 재무부는 2022년 말까지 PGPA 규칙 2014의 보조금 규칙·지침(CGRG) 및 섹션 6A의 운영을 검토하기로 함

2. 호주 정부 보조금 보고에 관한 호주감사원 보고서(ANAO information report on Australian Government Grants Reporting)

- 2021년 10월 19일, 감사원(ANAO)의 보고서(2021–22 No.7)는 보조금 검토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임

-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의 "통합시스템(GrantConnect)"하에서 관계 기관의 자체 보고, 보조금 지출 등에 대한 통찰력 및 투명성을 제공함
-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분석함
  - 정부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비용
  - 보조금 관리 및 통합시스템(GrantConnect)에 대한 자체 보고
  - 보조금 수령자 지급
- 추가적으로 재무부는 영연방 기관들과 통합시스템을 강화할 기회를 위해 협력 중임
  - 사용자가 통합시스템(GrantConnect) 데이터 및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성 향상 기능에 중점을 둠

3. 통합시스템 데이터 다중 스트림 가이드(Publishing grant guidelines for multi-stream Grant Opportunities on GrantConnect)

- 감사원(ANAO)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GO ID가 매칭되지 않고 지급된 다수의 보조금이 있다고 언급함
  - 재무부는 하나의 게시물 내에 여러 개의 문서정보가 포함된 지침을 게시할 때, 각 문서에 대한 선택 프로세스와 마감일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문서정보/기회당 한 번씩 게시할 것을 권장함
    - 예시: 현재 폐쇄형 비경쟁적 선택 스트림과 표적형 경쟁 스트림을 포함하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폐쇄형 비경쟁 보조금, 표적형 경쟁 보조금 각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지급된 각 보조금은 관련 GO ID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경로의 보고에 대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음

4. 영연방 평가 정책 및 툴킷(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and toolkit)

- 재무장관은 2021년 12월 1일에 발효된 영연방 평가 정책 지원 툴킷을 승인함
  - 해당 정책 및 툴킷은 호주공공서비스(APS) 전반의 일상적인 실무에 평가 능력과 전문성을 구축하고, 정책 주기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실무 평가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설계·전달·효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상임
    - 40개 이상의 영연방 기관과 다수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설계 및 사용자 테스트 등 관련 개발에 도움을 줌
  - 2022년 1월부터 재무부는 호주공공서비스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영연방 전체에 정책 및 툴킷

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임

– 요청 시 맞춤형 정보 세션도 제공됨

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툴킷(Grants Administration Counter Fraud Toolkit)

-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때 부정수급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보조금은 정부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혹은 제한된 자원으로 설계·제공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영연방 부정수급 방지 센터의 해당 툴킷은 호주 정부 공무원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보조금 관리에서 부정수급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이러한 취약점이 어떻게 부정수급에 노출될 수 있는지 이해함
    – 부정수급을 방지·감지,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대책을 식별함

6. 보조금 허브 운영에 관한 감사원 성과감사(ANAO performance audit on Operation of Grants Hubs)

- 감사원(ANAO)은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평가하는 기관 간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은 보조금 관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됨
  - 감사 대상은 재무·산업·과학·에너지 및 자원·사회서비스부이며, 해당 감사는 2022년 3월 게재될 예정임

7. 차기 보조금 실무 커뮤니티(Next Grants Community of Practice)

- 차기 보조금 실무 커뮤니티(CoP)는 호주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조금 실무자가 영연방 보조금 정책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와 더 나은 관행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차기 보조금 실무 커뮤니티(CoP)는 2022년 초 재무부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참여에 관심 있는 공무원, 토론 주제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 바람

8. 연간 장관 보고 요건(Annual Ministerial reporting requirements)

- 영연방 보조금 규칙·지침(CGRGs)의 문단 4.12 및 PGPA 규칙 섹션 25E에 따라 장관은 공무원이 승인한 보조금이 거부된 경우 재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2021년 재무장관 보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보조금 보고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
    - 보조금 보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RMG412: 호주 정부 보조금 브리핑, 보고, 평가 및 선거 공약

9. 영연방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 경로(Where to find information on the Commonwealth grants framework)

-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연방 보조금 프레임워크 정보가 있음
  - 해당 자원에는 영연방 보조금 규칙·지침(CGRGs), 보조금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보조금 뉴스 시리즈도 포함됨
  - 또한 영연방 기관들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및 템플릿 보유
    - 보조금 기준 지침을 개발
    - 보조금 계약 및 변경사항 개발
    - 장관 보조금 보고 지원

참고자료

호주 재정부, “Australian Government Grants News-December 2021 Edition,” 2021. 12. 22.,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australian-government-grants-news-december-2021-edition, 검색일자: 2022. 5. 25.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보조금 허브 운영

(Operation of Grants Hubs)

– 2022. 3. 31., 호주 감사원(ANAO) –

1. 감사 개요

- 최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는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 및 효과를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감사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함
  - 목표한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의 설계 및 거버넌스는 적절하게 마련되었나?
  -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브는 적절하게 구축·운영되었나?

2.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SGGA)–보조금 허브

- 정부 보조금 관리 효율화(Streamlining Government Grants Administration, 이하 SGGA) 프로그램은 2015–16년에 정부 전반에 걸쳐 보다 단순하고 일관적이며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 2015–16년 디지털 전환 아젠다 1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SGGA 프로그램이 도입됨
    -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4년 동안 950억원을 지원함
    - 이니셔티브는 정책 결과의 향상, 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경험 개선, 정부의 보조금 관리 능력 개선, 투명성 향상, 분석능력 향상을 계획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함에 따른 총 연간 재정 편익은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성과를 수립

〈표 1〉 SGGA 프로그램 핵심 성과

핵심 성과
1. 통합 정부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는 2016. 3. 승인 및 2016. 12.까지 참여기관에서 구현하는 여섯 가지 업무 운영방식을 수립
2. 2개의 보조금 허브는 가장 큰 12개의 영연방 참여기관에 대한 다음의 보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 * 비즈니스 보조금 허브 – 산업, 과학, 에너지 및 자원부에서 운영 * 지역사회 보조금 허브 – 사회서비스부에서 운영 – 각 허브는 자체 보조금 관리 정보 및 통신기술(ICT)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채택함 – 허브로의 보조금 프로그램 전환은 2016. 7.에 시작하여 2017. 9.까지 완료
3. 2016. 6.까지 보조금 간 연결성 및 허브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2017. 6.까지 허브 외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관 간 보고 개선을 위한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 구축
4. 2017. 12.까지 시장 테스트 – 시장 테스트에는 다른 조직이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장 접근을 포함하여 대체 전달 모델을 고려 * 비용, 이익 및 위험 등을 고려

- 허브(Hub)는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산업·과학·에너지 자원부) 및 사회복지부가 각각의 사업보조금허브(BGH), 지역보조금허브(CGH)를 건설·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재무부는 디지털 전환 대행사(DTA)의 지원을 받아 SGGA 프로그램의 거버넌스를 담당함
  - 도입 초기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12개 영연방 기관이 정부 보조금 관리 합리화 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 지정됨
  - 2016년 10월부터 정부는 참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절차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효하고, 참여기관이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제나 연기가 허가되지 않는 한 허브(Hub)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허브 사용 원칙 정책은 2016–17년 중기 경제 및 재정 전망에 포함되어 시작되는 모든 신규 보조금 정책에 적용되며,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허브로 전환될 예정임

3. 감사 결과

- 감사에서 허브를 통한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다음의 문제가 확인됨
  - SGGA 프로그램이 보조금 관리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핵심 성과의 미달성, 허브의 설계 및 운영상 결함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목표한 계획들의 달성에 영향을 미침
  - 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경험 개선, 비효율 완화, 정부 효율성

● SGGA 프로그램의 설계 및 거버넌스는 효과적이지 않았음

-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계는 합리적인 증거 기반에 의해 지원되지 않음
  - SGGA 프로그램 수립 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정보가 없었고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에 혜택이 제공됨
  - 연구에 따르면 초기 정책 제안서는 총 보조금 관리 비용에서 ICT 비율을 300억원 가량 과대평가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재정 편익이 3,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에 영향을 미침
  - 유사하게 추정 기준치(약 10조원의 총보조금기금)를 기준으로 2,700억원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보조금 기금은 추정 기준치보다 훨씬 적었음
- 거버넌스 전략이 수립되었지만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이익, 성과 달성을 지원하지 못함
  - 수립된 거버넌스 전략이 계획한 대로 작동할 수는 없으나 전략의 변경사항이 매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음
  - SGGA 프로그램 실행 계획은 2017년 7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2015~2020년 사이에 발생한 모든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그 밖에 2016년 검토에서는 실행 계획의 많은 주요 프레임워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참여기관의 위험관리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접근방식, 프로그램의 범위·명확성·접속대기 등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수립된 전략이 목표 달성까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침
- 결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았음
  - 성과 달성 전략이 개발되었으나 SGGA 프로그램 실행 계획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성과지표는 측정할 수 없었고, 성과 및 편익의 달성을 명확히 보여줄 기준·목표 등이 불명확하였음
- SGGA 프로그램은 측정 가능한 지표, 기준, 목표 등의 부족으로 인해 목표한 결과 달성을 입증하지 못함
  - SGGA 프로그램 성과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음
- 핵심 성과와 관련하여 산업부와 사회복지부는 두 개의 보조금 허브를 구축했지만 데이터 통합 관리, 시장 테스트와 같은 여섯 가지 업무 운영을 통한 통합 정부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않음

- ICT 보조금 관리를 위한 각각의 허브가 제공되었으나 보조금 프로그램의 허브 전환이 지연되었고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채택되지 않았음
- 다른 세 가지 핵심 성과물인 통합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통합 관리, 시장 테스트 등 또한 달성되지 않았음

● 보조금 허브의 구축 및 운영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음

– 보조금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은 다소 향상되었지만 전체 보조금의 프로세스, 허브와 클라이언트 기관 간의 협업, 데이터 관리를 위한 허브 사용과 관련하여 결함이 존재

– 허브의 성과 달성을 측정할 적절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지 않았음

- 허브는 개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편익 프레임워크와 성과지표가 있었지만 SGGA 프로그램 편익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또한, 많은 성과지표가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목표에 미달함
- 성과달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준치가 초기에 설정되어 있지 않음

– SGGA 프로그램의 예상 편익이 달성되었다는 제한적인 결과 확인

- 허브는 효과적인 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원함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보조금허브(BGH), 지역보조금허브(CGH)는 법적 요구사항을 비교적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업무체계 및 전달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데이터 관리·품질의 문제가 발견됨
- 서비스 기준이 개발되었지만 지역보조금허브(CGH)에서만 보고되었고 설계, 사용 단계에서 참여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은 편차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허브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지원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

● SGGA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인 정부의 보조금 관리 합리화를 위한 표준화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의 수립은 달성되지 않았음

● 허브의 서비스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비용 관리 모형의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했지만 허브를 통한 비용 회수를 입증할 수 없었음

참고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ANAO), “Operation of Grants Hubs,” Performance Audit Report, Auditor-general report No.21 of 2021-22, 2022. 3. 31., available at: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operation-grants-hubs, 검색일자: 2022. 5. 31.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6. 뉴질랜드

위험특성 평가 템플릿 2022

(Risk Profile Assessment Template 2022)

– 2022. 3., 뉴질랜드 재무부 –

■ 뉴질랜드의 각 부처는 중간 또는 높은 위험특성을 가진 모든 중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위험특성 평가(Risk Profile Assessment, 이하 RPA)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재무부에 제공해야 함. 본고에서는 RPA가 제공하는 투자사업의 위험특성 평가 템플릿을 간략하게 소개함

〈표 1〉 위험특성 평가 가이드

1. 위험특성 평가(RPA)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다년도 계획 중 중간 또는 높은 위험특성을 가진 모든 중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위험특성 평가(Risk Profile Assessment , 이하 RPA)를 완료해야 함
정의: 투자(Investment) • 투자(Investment)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적, 물리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함. 자원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입됨 • 투자에는 자금 출처, 지출 유형 또는 정부 재정 지원의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 활동이 포함됨 –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거나 부처를 통해 관리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또는 인프라에 대한 변화(취득 또는 처분) – 신규 임대 계약 또는 갱신 임대 계약(예: 부동산 임대) – 왕립금융기구 등에서 수행하는 금융 투자 기능 포함
정의: 중대한(Significant) • 중대한의 의미는 아래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 기관, 국민, 각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정부의 재정 전략,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도가 높은 투자들 – 내각 또는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투자제안, 즉 고위험제안 또는 전체 비용(WOLC)이 1,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제안 – 특정 기관 또는 부문의 중요도에 대한 임계값은 투자자 신뢰도 평가(Investor Confidence Rating)를 통해 결정된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위험특성 평가(RPA)란 무엇인가?
프로그램/프로젝트 관리자는 RPA를 완료해야 하며, 직위가 없는 경우 차상위 관리자가 평가를 수행해야 함 • 프로젝트 집행방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기본적인 집행방식에 대해 RPA를 실시 • 둘 이상의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기관이 관리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RPA를 작성 • 프로젝트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전체 상위 프로그램의 RPA를 작성 프로젝트/프로그램 중: 이전에 고위험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프로그램/프로젝트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기관은 RPA를 검토하여 위험 수준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결과 위험 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경우, 투자 관리 및 자산 성과 팀에 RPA를 제공해야 함

1.2. RPA는 두 가지 워크시트로 구성되며 모두 완성되어야 함

워크시트 1. 일반 정보(Authorisation and General Project Information)

프로젝트 관리자 및/또는 연락 책임자(Senior Responsible Owner, SRO)에 대한 일반적인 세부 정보가 제공됨

SRO는 프로젝트 결과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

워크시트 2. 위험특성 평가(RPA worksheet)

위험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선택하여 워크시트를 작성. 각 질문에 대한 안내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추가 정보는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

RPA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26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 프로젝트 배경(Project's Strategic Context)
- 프로젝트의 범위(Project's Scope and Complexity)
- 프로젝트 집행방식(Project Delivery Capability and Approach)

RPA는 각 섹션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높음', '중간', '낮음' 등으로 위험도를 평가함

2. 비용의 계산

전체 수명비용(Whole or Life Costs, (WoLC) – 정의

전체 수명비용이란, 투자를 통해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원의 현재 가치(PV)를 의미

i. 이 정의는 자산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안의 시간, 금액 및 규모를 고려함 이는 비용 편익 분석 지침에 요구되는 경제 분석과 일치함
ii. 자원에는 최초 자본이나 운용원가와 같은 현금원가, 자산이나 용역의 기대존속기간 동안 지속되는 운용원가와 그 밖의 자원(예: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이 포함됨. 운영 인력 비용이 필수적인 경우 운영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
iii. 자원은 감가상각비, 자본금 및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제외함
iv. 현재가치는 투자 유형에 적합한 공공부문 할인율로 연간 자원 흐름을 할인하여 결정

3. 편익(Description of Benefits)

금전적(Monetary): 금전적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이익, 회피비용 또는 효율적 절감 포함

비금전적(Non-monetary): 금전적인 측면에서 측정될 수 없는 이익으로서 고객 불만 감소와 같이 정량화할 수 있거나 건강상태 개선과 같이 질적일 수 있음. 질적 편익은 관찰될 수 있지만 쉽게 측정되지는 않음

4. 전략적 연계(Strategic Alignment)

프로젝트가 아래 전략적 우선순위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설명해야 함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

-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구축
- 뉴질랜드인과 가족의 복지 증진
- 정부에 의한 새로운 리더십 제공

부처 및 기관, 부문별 전략

정부 전체의 전략

예를 들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위한 전략, 부동산 임대 전략, 기업성장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 디지털 정부: https://www.digital.govt.nz/
- 생활표준 프레임워크: https://treasury.govt.nz/information-and-services/nz-economy/living-standards/our-living-standards-framework
- 부동산 및 조달: https://www.procurement.govt.nz/
- 인프라 위원회: https://infracom.govt.nz/

5. 최종위험등급 결정

기관이 RPA를 "중간" 또는 "고위험"으로 자체 평가하는 경우, 재무부의 투자관리 및 자산성과 부서(Investment Management & Asset Performance, IMAP)는 다른 모니터링 기관과 협의하여 RPA를 검토하며,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최종 위험 등급을 결정함. IMAP는 부처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위험특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최종 위험 등급에 따라 게이트웨이 검토 여부가 결정됨

6. 검증된 프로젝트 관리 방법(Proven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검증된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예: PMI Body of Knowledge, AXELOS PRINCE2, AXELOS PRINCE2 Agile, MSP(Managing Success Programs)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SAFe Agile 등의 접근방식)

검증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는 다음이 포함됨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축
- 성공요인 파악과 주기적 검토
- 리스크 관리
- 품질관리
- 변화 관리
- 보안
- 커뮤니케이션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프로젝트 종료 및 사후 검토
- 편익검토(Benefits management)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Risk Profile Assessment Template,"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risk-profile-assessment-template 검색일자: 2022. 4. 7.

참고문헌

뉴질랜드 재무부, "Risk Profile Assessment Template,"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risk-profile-assessment-template 검색일자: 2022. 4. 7.

(작성자: 임소영 선임연구원)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CONTENTS

1. 국내 연구 동향
2. 국외 연구 동향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양지숙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pp. 139~166 –

1.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 년 동안 조직의 운영,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임

-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주민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낭비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 지방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

- 본 연구는 지방투자사업 추진실태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낭비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였음. 또한, 예산 낭비에 대응하여 중앙 및 지방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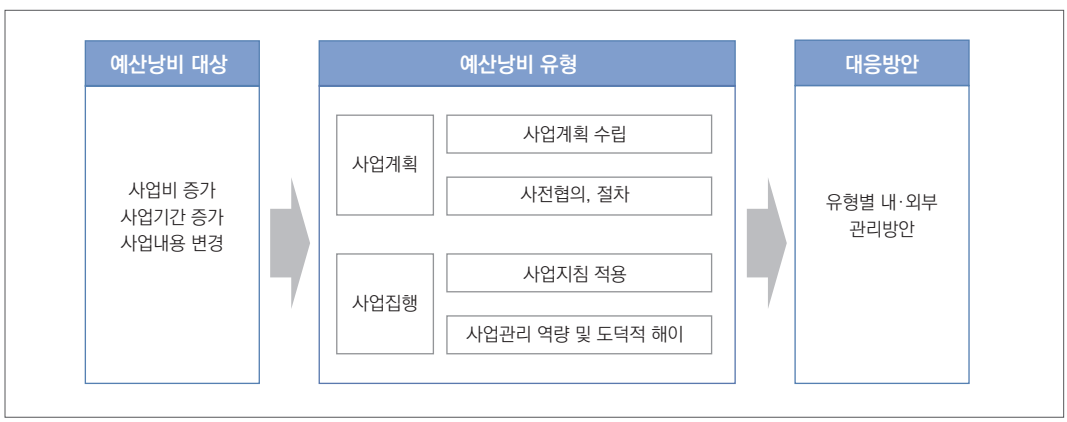
2. 연구설계

- 행정안전부의 지방투자사업 이력 관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A지역을 선정함

- 분석기간은 지방투자사업이 계획되고 완공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며, 대부분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 및 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분석 대상임
  - 사업비 규모는 분석기간에 적용되던 지방투자심사기준을 고려하여 300억원 이상을 포함하되, 2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의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 A지역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 투자심사 통과 이후부터 2018년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조사표를 해당 지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함
  - 보완적으로 지방투자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사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투자사업 이력 관리 결과를 활용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자료: 양지숙·문광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22, p. 147.

3. 결론

-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사업추진 방식의 비효율, 유사중복 투자, 관련 절차 또는 규정 이행 소홀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적용 미흡으로 인한 낭비 유형이 주로 나타났음

-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법령(기준) 적용 미흡, 물품·계약·공사 등 사업관리 미흡,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의 도덕적 해이 및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적용 미흡 유형이 나타남

- 기존 연구 결과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간 다양한 사업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정부 차원에서 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짐에도 예산 낭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 유형의 특징에 따라 사업계획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주기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가 중요함
  - 특히 중앙 차원에서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조하기보다는 지방 스스로 사업추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기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및 외부 관리·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함

-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과 범위를 보완하여 예산 낭비의 실태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양지숙·문광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22, pp. 139~166.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이정철 · 이정욱,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pp. 317~349 –

1. 연구목적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결과지향적 관리방식을 통해 조직의 혁신과 자율적인 성과향상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제약 요건들과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성과관리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인 공공조직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제 성과관리 과정에 내재하는 관리적 한계나 오류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제도의 외적인 수정만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러한 역기능적이고 역설적인 현상들을 성과역설로 정의하였을 때 성과역설이 심화될 경우 측정되어야 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므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체계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적·운영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전략적 현상을 어떻게 관리·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 성과관리에서 성과역설 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성공적 운영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강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효과성·책임성 제고가 성과지표설계 및 측정단계에서 저해되는 현상을 성과역설로 정의하여, 이러한 성과역설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에 있음

2. 성과관리와 성과역설

- 성과의 개념
  - Bouckaert and Halligan(2008):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등 조직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화
  - Otley(1999): 달성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
  - Hatry(2006): 투입이나 과정(활동)에 대비되는 산출 및 결과

- 성과관리의 기대효과
  - 조직이 어느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예산, 기술, 역량 등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 조직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결과 지향적 관리를 통해 달성한 최종 결과와 성과 달성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제고 기대
  - 조직구성원, 국민 등 조직 내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자원 배분상의 효율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 강화 등에 기여
  - 계획 수립과정부터 측정, 평가·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업무 추진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조직 개선에 기여

- 성과역설 현상
  - 긍정적인 학습(positive learning)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성과지표가 관리 수단으로서 변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 성과관리에 대한 잘못된 학습(perverse learning)으로,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평가 등에 유리하기 위해 성과를 왜곡, 조작하는 사례 등
  - 대체(selection)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성과가 우수한 조직이나 개인들만을 포함하여 성과지표가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성과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는 경우(suppression)

- 성과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역설 현상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직의 이해와 목적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성과관리 과정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할 수 있음

- 또한, 관료들이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속임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도덕적·윤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3. 결론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결과물과 성과관리 노력이 조직의 상위 목표와 비전 달성 등에 기여하는지 연계적 관련성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측정이 쉬운 지표를 선정하려는 경향은 회의 개최 실적이나 교육 시행 실적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과정적 노력이나 산출물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사례로 나타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정지표나 단순 산출에 가까운 지표를 활용하기보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성지표를 보완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체평가가 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함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장기 성과에 대한 측정을 위해 자체평가의 대상을 관리 과제에서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자체평가 업무 등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담당 조직이나 담당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성과관리 이해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평가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교차평가 등의 운용이 강조됨

- 결과의 환류에서도 평가담당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들이 책임성을 지닐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이정철·이정욱, 「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2022, pp. 317~349.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2. 국외 연구 동향

정부의 성과와 신뢰 연계에 대한 메타분석: 문화적, 방법론적 요인을 고려하여

(A Meta-Analy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Trust Link: Taking Cultural and Methodological Factors into Account)

- Jiasheng Zhang, Hui Li, Kaifeng Yang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ume 82 Issue 1, 2022. 2. 4., pp. 39~58.

- 본 연구는 정부의 성과와 신뢰 사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30년에 걸친 연구를 메타분석함
  - 일반적인 정책은 물론이고 강제성을 띈 정책 시행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함
    - 그 예로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강제적 성격의 정책을 시행함
  - 정부의 성과와 신뢰 관계는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 또는 성과정보의 제공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와 신뢰 연계를 주제로 한 30년간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음

1. 성과와 신뢰의 연계: 다양한 원인

- 성과와 신뢰의 연계에 대한 연구들은 신뢰는 문화적인 부문에서 형성된다는 문화적 접근과 신뢰는 정부 수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로 나눠짐

1) 문화적 접근방식: 민족문화

- 정부의 성과와 신뢰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국가 문화가 행정 개혁과 정부의 공공관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문화적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Hofstede(2001)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2] 개인주의(individualism),[3] 남성성(masculinity),[4]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5] 장기 지향성 문화(long-term orientation)[6]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은 다양한 연구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됨
  -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 중 권력거리에 초점을 맞추며, 권력거리가 높은 나라(예: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의 국민들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계층적 질서를 쉽게 받아들임
    - 이와 같은 성향은 권위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성과의 중요성은 떨어짐
  - 반대로, 권력거리가 낮은 국가(예: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국민들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중요시하고, 정부 권위에 대해 거부감을 보임
    - 이는 공공기관의 감사를 통해 감시하는 등 정부 성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는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중요해짐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성과측정 방법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성과 콘텐츠 유형, 분석 수준 등이 있음

객관적(Objective) 지표와 주관적(Subjective) 지표

-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는데, 두 유형의 정의 및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이 외에도 측정 유형이 성과와 신뢰 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객관적 지표는 외부, 관찰 가능한 현상에 관한 것으로 GDP 성장, GINI 지수 또는 제공된 서비스 수 등을 포함함
  - 주관적 지표는 정부의 성과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정성, 부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

2)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조직과 기관의 구성원들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Hofstede, 2011)
3)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돌봐야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사생활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며 이와 반대되는 가치관으로는 소속된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있음(Hofstede, 2011)
4) 남성성(masculinity)은 성별 간 정서적, 사회적 역할에서 최대 차이를 지향하는 등의 남성성을 강조하며 반대되는 가치관으로는 성별 간 정서적, 사회적 역할에서 최소 차이를 지향하는 여성성(Femininity)이 있음(Hofstede, 2011)
5)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를 하는 문화는 엄격한 행동 규범, 법과 규칙 등에 안정을 느끼며, 일탈된 의견 및 위험에 대해 불안해 함(Hofstede, 2011)
6) 장기 지향성 문화(long-term orientation)는 장기적 관점으로 절약 및 저축, 인내가 중요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반대로는 단기 지향성 문화(Short-Term orientation)가 있음

족도를 포함함

- 동일한 주제인 거시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더라도 Houston et al.(2016)은 객관적 지표인 실업률을 사용한 반면, Grönlund and Setälä(2012)는 주관적 지표인 공무원의 정직성과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사용함

- 주관적 지표는 조직 및 개인의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부 성과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러한 주관적 지표의 특징으로 정부는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음
  - 정부 성과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이념, 불합리성, 입소문, 언론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성과 콘텐츠 유형(Types of Performance Content)

- 성과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생산(outputs), 결과(outcomes), 시민 만족도(citizen satisfaction) 및 민주적 과정(democratic processes) 네 가지를 검토함
  - 생산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결과에는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등의 공식적인 효과와 영향이 포함됨
  - 시민만족도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함
  - 민주적 과정 지표는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참여, 성실성, 책임성을 포함함

분석 수준(Levels of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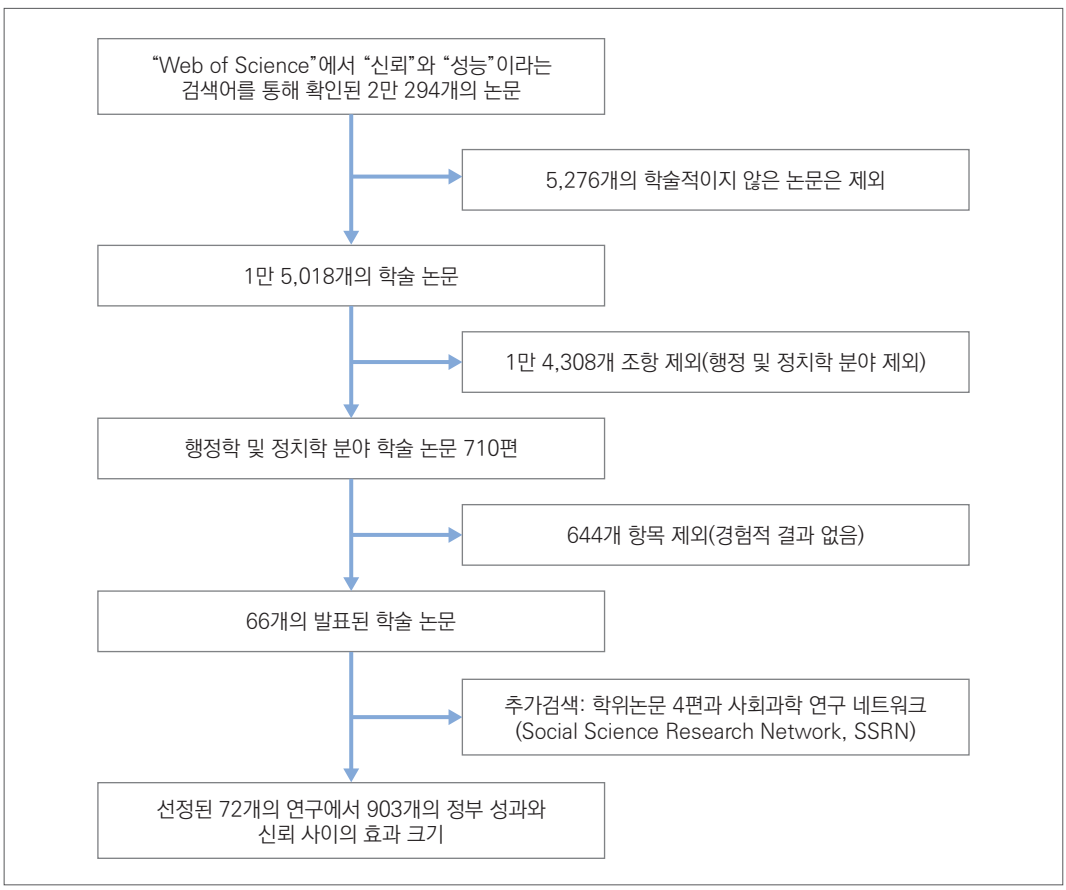
-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분석할 때는 전체(정부)와 부분(기관)의 구분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은 필수적이며, 각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수행의 효과는 기관마다 다르며, 이는 국민들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국민들은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정보를 사용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연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2. 데이터와 방법론

-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수집되었으며, “Web of Science”의 “주제” 분야에서 “신뢰”와 “성과” 단어를 검색하여 총 1만 5,018개의 연구를 도출한 후, 그중 공공행정과 정치학 분야, 다양한 통계 테스트, 결정계수(R-Squared)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총 72개의 연구를 선택함
  - 72개의 연구에는 903개의 정부 성과와 신뢰 관계의 효과가 포함되며, 결합된 표본의 크기는

1982년부터 2016년까지 100개국에 걸쳐 90만 9,639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연구 수집과정



출처: Jiasheng Zhang, Hui Li, and Kaifeng Yang, "A Meta-Analy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Trust Link: Taking Cultural and Methodological Factors into Accou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1), 2022, p. 42.

- 종속변수는 정부 성과와 신뢰 관계의 효과 크기이며, 랜덤 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효과를 확인함
  - 세 개의 모형을 통해 효과 크기를 확인하며, 모형 1은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만 포함하며, 모형 2는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만 포함하고, 모형 3은 모형 1과 모형 2를 합쳐서 설명함
    - 권력거리가 낮은 국가는 권력거리가 높은 국가에 비해 정부 성과와 신뢰 관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객관적 지표의 경우, 정부 성과와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성과콘텐츠 유형에서는 산출 부문에서 정부 성과와 신뢰 관계에 큰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민의 만족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수준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 내에서 신뢰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결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성과와 신뢰는 다양한 요인 중 성과 측정과 분석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방식도 민감하게 반응함

- 문화적 접근방식 중 권력거리가 낮은 국가일수록 성과와 신뢰의 관계가 더 강함을 보여주며, 국가 문화는 성과와 신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관계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확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민족문화를 바꾸거나 권력거리를 낮춰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며, 문화의 다양성이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다양한 문화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함

- 객관적 성과정보와 주관적 성과정보는 성과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성과와 신뢰 관계 자체를 보여줌
  - 두 성과정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둘의 이점을 활용하고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콘텐츠 유형 중에서는 생산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으며, 결과보다 민주적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과 콘텐츠의 선택은 성과 측정 목적에 따라 달라짐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려될 때, 결과보다 생산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측정 목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분석 수준의 경우, 정부 또는 특정 정부 기관에 초점을 맞추는지 여부가 성과와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와 신뢰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와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신뢰와 관련한 의견을 형성할 때, 전체와 부분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부 기관이 성과와 신뢰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신뢰에 더 영향을 주는 결과는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참고자료

Jiasheng Zhang, Hui Li, and Kaifeng Yang, “A Meta-Analy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Trust Link: Taking cultural and methodological factors into accou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1), 2022, pp. 39~58.

Geert Hofstede,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2011, pp. 1~26.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종료를 부추기는 요인은 무엇인가?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ume 42 Issue 1, 2022. 3., pp. 28~44.

- 본 연구는 정부의 프로그램(program)이 종료되는 원인을 찾고, 의회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먼저, 정부 프로그램의 종료를 초래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정부와 의회 위원회 직원들[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 예산안(President's Budget Request) 및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프로그램 효과 및 효율성 평가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함께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을 사용함

1. 설문조사로 살펴본 프로그램 종료 배경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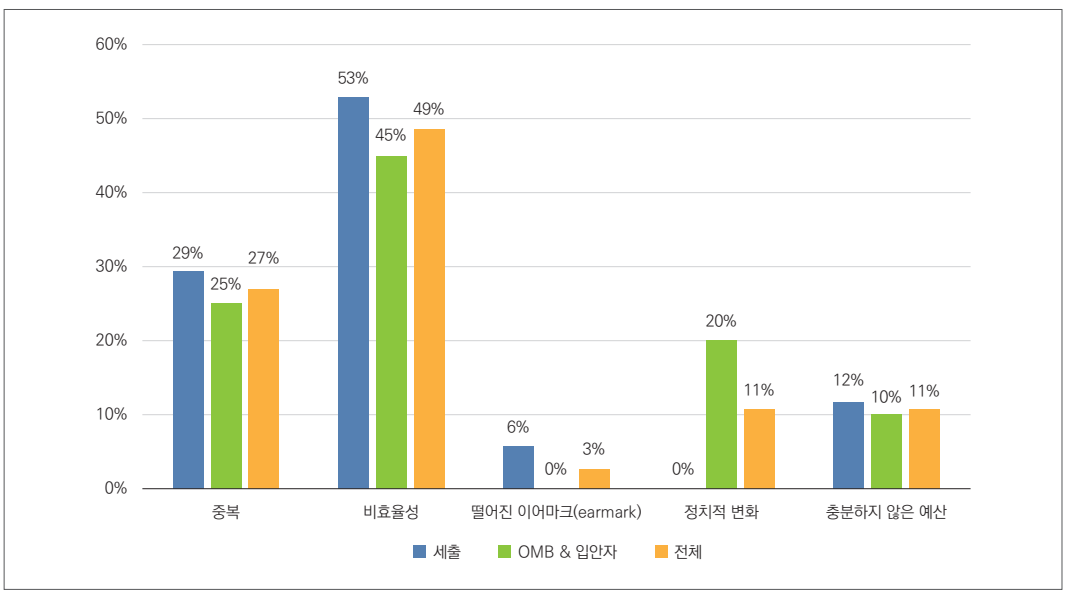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종료 요인은 크게 정치적인 이유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으로 볼 수 있음
  - 공화당 의회와 민주당 의회는 서로가 만든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권하는 당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함
  -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들고,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의 종료에 영향을 주며 조직이나 정책에 비해 프로그램은 쉽게 폐지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어떤 요인이 프로그램의 종료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예산 직원과 정책 관계자들에게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 findings)과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7)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상원예산위원회(Senate Budget Committee), 하원·상원세출위원회(House and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s), 다양한 의회 승인 위원회(congressional authorization committees)

- 개방형 질문은 의회가 재직기간 중 프로그램을 종료했는지 여부를 물어 프로그램의 의미와 종료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후, 구체적인 예시를 물어보고 개방형 질문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그림 1]과 같음
  - 응답자 중 49%는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27%는 프로그램의 중복을, 11%는 정권이 바뀌는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를, 11%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 나머지 3%는 떨어진 이어마크(earmark)[8] 때문이라고 답함

[그림 1] 개방형 설문응답 결과



출처: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42(1), 2022,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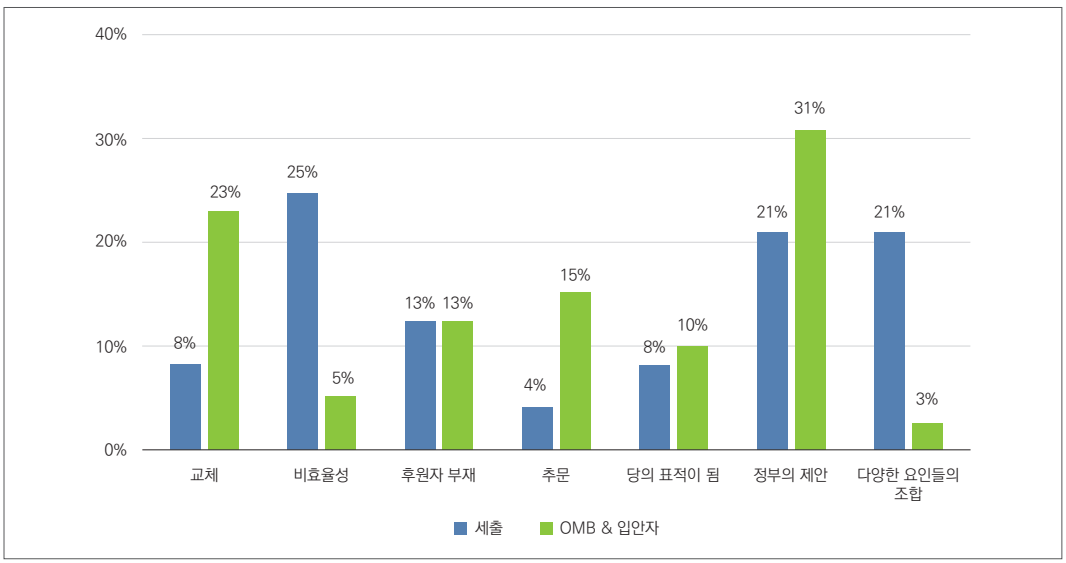
- 폐쇄형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기를 제공한 후, 경험에 따르면 의회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유들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음
  - a. 성과정보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임
  - b.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회의 후원자 또는 옹호자는 은퇴, 사망 또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음
  - c. 해당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구설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홍보가 되었음
  - d. 정당 또는 캠페인의 표적이 되어 종료됨
  - e. 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요구

8)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연방예산을 특별히 할당받는 행위

f. 기타

- 가장 많았던 대답은 27%로 e(정부의 종료요구)라고 답하였으며, 13%는 a(프로그램의 비효율), 13%는 b(예산 관련자의 은퇴 및 선거 패배), 11%는 c(부정적 홍보), 11%는 d(표적이 됨)로 답하였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출부문 직원들은 a(프로그램의 비효율, 25%)를, OMB 직원들은 e(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요구, 31%)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음

[그림 2] 폐쇄형 질문응답 결과



출처: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42(1), 2022,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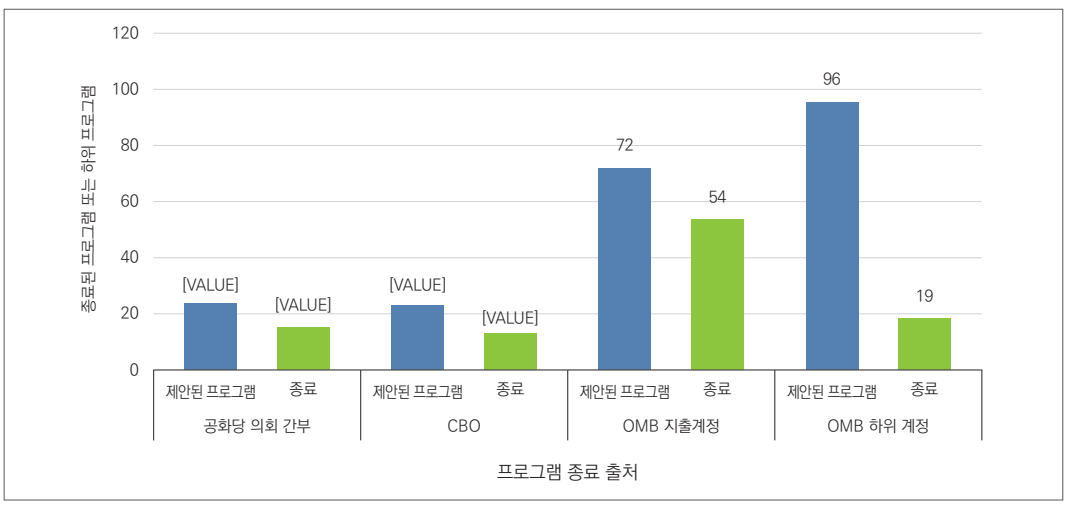
2. 데이터로 살펴본 프로그램 종료 배경 및 요인

-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요구라는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연방 예산 데이터 분석을 진행함
  - 데이터는 OMB와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가 동의한 지출 계정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의 지출액이 0으로 표기되거나 해당 수준에 머물렀을 때 종료가 됐다고 판단함
    -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 정부의 프로그램 삭감 및 종료 보고서를 사용함
  -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프로그램의 종료를 요구한 72개의 프로그램 중 54개 프로그램이 종료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요구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과감한 정책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종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리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의 종료도 포함하여 정부 및 OMB의 영향력이 과장되게 보일 수 있음

[그림 3] 정부의 권유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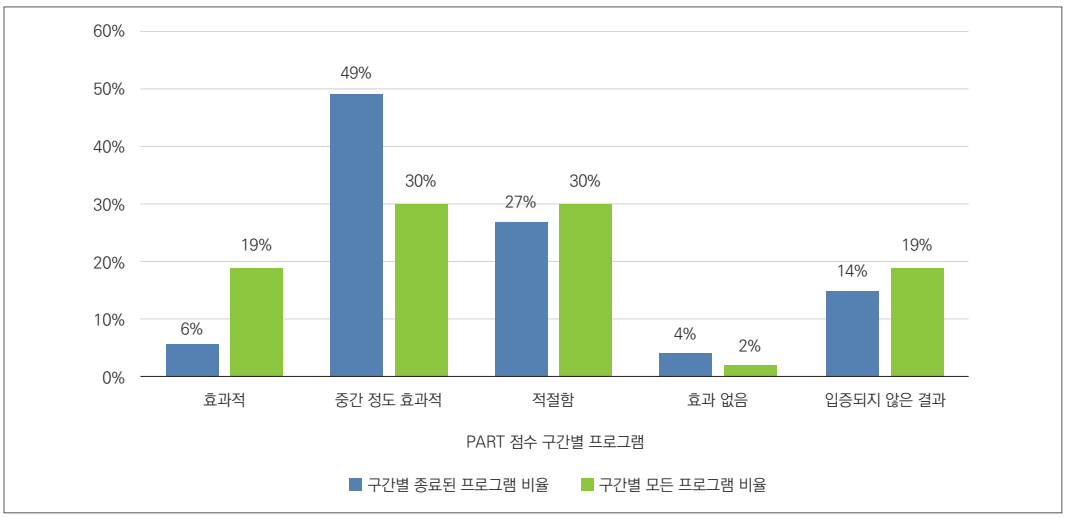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42(1), 2022, p. 37.

-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이 프로그램의 종료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시 정부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를 사용함
  - PART는 연방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와 예산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며,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설계, 전략적 계획 및 성과 측정의 사용, 재무 관리 및 결과를 다루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함
    - PART에 의해 평가된 778개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찾았으며, 2005~2010년 회계연도에 71개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였음
  - [그림 4]는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종료된 프로그램의 분포를 사업평가측정기법의 점수에 따라 가시적으로 보여줌
    - 점수가 낮게 평가된 프로그램보다 높게 평가된 프로그램에서 종료된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종료가 해당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함

[그림 4] PART 점수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 비율



출처: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42(1), 2022, p. 41.

3. 결론

- 본 연구는 정치적 또는 성과 기반 중 어떤 요소가 프로그램 종료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OMB 및 CBO 데이터, PART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 세출부문 직원과 OMB 직원들의 대답은 비효율성, 정치적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공통적으로는 정부의 요구가 종료의 주요 원인이라고 대답함

- OMB 및 CBO 데이터로 대통령 예산이 프로그램 종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의회와 대통령의 정당에 따라 종료된 프로그램의 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

- 마지막으로,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을 통해 비효율성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은 프로그램이 높게 받은 프로그램에 비해 프로그램 종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Stuart Kasdin and Anthony McCann, “What drives program terminations for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42(1), 2022, pp. 28~44.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Ⅲ. 국가계약 동향

CONTENTS

1. 국내 동향
2. 국외 동향

Ⅲ.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동향

- 조달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① 경제활력과 회복을 선도하고, ②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구현하며, ③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과, ④ 역동적인 혁신조달의 추진방안, ⑤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조달 서비스 확대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조달청에서 그동안 통계보고서 형태로 제공해 온 '지역별 기관 및 업체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를 소개함

조달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 2022. 1. 11., 조달청 –

- [경제활력] 조달계약 34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벤처나라 판매 1,500억원으로 확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 [국민안전] 해외의존 수급조절물자 긴급구매 지원(481억원), 비축원자재 외상·대여 방출 추가지원, 군(軍)급식 안전 강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정착
- [미래대응] 사회적 가치(공공조달 ESG) 평가 도입, 탄소중립·녹색조달 기반 강화, 역동적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다음의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

■ 조달계약의 63%(34.2조원) 올해 조달계약 전망 54.4조원 중 63%인 34.2조원(전년 상반기 27.1조 대비 7.1조원, 26.2% 증가)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임

- 상반기에 조달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임
- 한시적 계약특례 경쟁입찰에 대한 긴급입찰 허용, 선금·하도급대금 단축 지급(신청 후 5일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체·불이행은 제재 면제 및 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임

■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

-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3억원)을 도입하여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255억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
-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
-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으로 우리 강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2.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 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 · 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

-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하여 신속 도입을 지원
-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 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

  * (외상판매) 최대 2차, 15개월 → 3차, 18개월 / (대여방출) 최대 2차, 9개월 → 3차, 12개월

■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함
-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임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시설물을 계약·관리

-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 강화
-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 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임

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

■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

-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범적용

-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확대·신설

■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
-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

■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임
-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
-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져온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 기반을 토대로 2022년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를 기획함
-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원→2022년 465억원으로,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2022년 500개 이상(누계 기준)으로 확대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全) 과정을 통합 지원

■ 현장에 숨어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
-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
-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확대 위촉(20명→50명)하여 현장의 혁신제품 발굴

- 혁신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혁신제품 준비·지정·성능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제품 개발, 기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5. 디지털 · 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 ·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를 기획 중임
  -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

    * 고객경험 기반 UI·UX, 지능형검색, 전자캐비닛 도입, 조달데이터허브 구축 등
  - 2024~20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문제는
    -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함
  -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하며
  -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임

    *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6종

- 조달청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조달청 보도자료, 「공공조달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2022. 1. 11.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 제공

– 2022. 2. 16. 등, 조달청 –

- 조달청은 그동안 통계보고서 형태로 제공해 온 ‘지역별 기관 및 업체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서비스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함
  -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지역별 기관·업체의 계약실적을 비롯해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 비교, 연도별 추이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그래프로 구현함

- 조달청은 해당 서비스에 기반하여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20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총 120조원으로 이 중 서울은 기관이 16.5조원(13.8%)을 계약하여 17개 시·도 중 경기(17.4조원)에 이어 2위, 업체는 25.4조원을 계약하여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기관 계약실적은 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

    * 연도별 서울 소재 기관 계약실적: ('19년) 14.6조원 → ('20년) 17.0조원 → ('21년) 16.5조원

    – (업무별) 용역 6.1조원(37.0%), 공사 5.3조원(32.1%), 물품 5.1조원(30.9%)

    – (자치구별) 중구 소재 기관 2.6조원, 성동구 소재 기관 1.7조원, 강남구 소재 기관 1.4조원 순

    – (공고건수) 3만 7,030건
  - 업체 계약실적은 25.4조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서울에서 10.1조원, 그 외 지역에서 15.3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

    * 연도별 서울 소재 업체 계약실적: ('19년) 21.2조원 → ('20년) 24.0조원 → ('21년) 25.4조원

    – (업무별) 용역 11.3조원(44.5%), 물품 8.5조원(33.5%), 공사 5.6조원(22.0%)

    – (나라장터등록) 서울 소재 전체 업체 82만 3,624개사 중 11만 7,359개사(14.2%)가 나라장터에 등록(17개 시·도 중 1위), 1,365개사(0.2%)가 종합쇼핑몰에 등록

    – (입찰참가) 2만 8,930개사가 1회 이상 입찰 참가

    – (계약건수) 납품요구를 포함한 계약건수는 44만 6,593건

- 다음은 경기도에 위치한 기관·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의 분석 결과로,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0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17.4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0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17.4조원으로 전국 120.0조원 중 14.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거래금액도 2019년 14.9조원, 2020년 16.8조원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
  - (업무별) 공사 7.0조원(40.1%), 물품 6.0조원(34.4%), 용역 4.4조원(25.5%)
  - (시군구별) 수원시 권선구 1.0조원, 화성시 1.0조원, 평택시 0.9조원 순
  - (기관별) 경기주택도시공사 4,789억원, 고양시 3,566억원, 성남시 3,409억원 순
  - (공고건수) 전체 공고건수는 4만 8,011건

- 업체의 계약실적은 납품요구를 포함 70만 7,686건, 24.5조원(전국 2위)으로, 전년 24.0조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에서 11.6조원(47.5%), 그 외 지역에서 12.8조원(52.5%)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별) 물품 10.5조원(43.1%), 공사 8.0조원(32.8%), 용역 5.9조원(24.1%)으로, 이 중 5.6조원(물품 5.5조원, 용역 0.1조원)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
  - (시군구별) 성남시 분당구 2.4조원, 화성시 2.2조원, 안양시 동안구 1.7조원 순
  - (나라장터등록) 경기도 소재 전체 업체 93만 4,349개사 중 나라장터 등록은 11만 4,298개사(12.2%, 전국 2위), 종합쇼핑몰 등록은 3,253개사(0.3%, 전국 1위)
    - 나라장터 등록 업체수 1위 지자체는 서울로 11만 7,359개사가 등록중
  - (입찰참가) 3만 5,094개사가 1회 이상 입찰에 참가

-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등 충청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임

- 2021년 기준 충청지역 소재 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경기(17.4조원), 서울(16.5조원)보다 많은 23.3조원을 계약한 것으로 집계됨
  - 충청지역 소재 기관 나라장터 이용 현황은 대전이 6.4조원, 세종이 4.9조원, 충남·북이 각각 6.0조원을 계약체결했으며, 4개 지역 모두 계약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별로는 용역 7.9조원, 물품 7.8조원, 공사 7.6조원으로 고르게 발주했는데, 대전은 물품,

세종은 용역, 충남·북은 공사를 주로 발주한 것으로 조사됨

〈충청지역 기관 나라장터 계약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물품	공사	용역
대전	6.0	6.3	6.4	3.1 (48.4%)	1.5 (23.5%)	1.8 (28.1%)
세종	3.9	4.3	4.9	0.7 (14.3%)	0.9 (18.4%)	3.3 (67.3%)
충남	5.0	5.3	6.0	2.0 (33.3%)	2.7 (45.0%)	1.3 (21.7%)
충북	4.6	5.2	6.0	2.0 (33.3%)	2.5 (41.7%)	1.5 (25.0%)
합계	19.5	21.1	23.3	7.8 (33.5%)	7.6 (32.6%)	7.9 (33.9%)

- 환경부(1.3조원), 육군군수사령부(1.1조원), 질병관리청(0.5조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0.5조원) 등이 주요 발주기관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업체는 총 15.8조원을 수주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 3.7조원, 세종 0.8조원, 충남 6.0조원, 충북 5.3조원으로 집계됨

- 업무별로는 공사 7.1조원, 물품 4.9조원, 용역 3.8조원을 수주했는데, 대전업체는 용역, 세종, 충남·북의 업체는 공사에서 강세를 나타냄

〈충청지역 업체 나라장터 수주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물품	공사	용역
대전	3.2	3.6	3.7	1.1 (29.7%)	1.2 (32.4%)	1.4 (37.9%)
세종	0.7	0.7	0.8	0.2 (25.0%)	0.3 (37.5%)	0.3 (37.5%)
충남	5.1	5.4	6.0	1.8 (30.0%)	3.0 (50.0%)	1.2 (20.0%)
충북	4.5	4.4	5.3	1.8 (29.4%)	2.6 (37.6%)	0.9 (33.0%)
합계	13.5	14.1	15.8	4.9 (31.0%)	7.1 (45.0%)	3.8 (24.0%)

- 4개 지역 소재 전체 업체수 중 11~16%가 나라장터에 등록, 0.3~0.4%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중하위권 수준임
  - 나라장터 등록 업체 중 2021년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대전 6,468개사, 세종 1,373개사, 충남 9,406개사, 충북 7,666개사임

〈지역별 업체수〉

(단위: 개사)

순위	전체	
	지역	업체수
1	경기	934,349
2	서울	823,624
3	부산	290,357
…		
8	충남	176,643
12	충북	133,522
14	대전	119,628
17	세종	18,041

순위	나라장터	
	지역	업체수
1	서울	117,359
2	경기	114,298
3	경남	28,656
…		
10	충남	20,334
12	대전	17,418
13	충북	16,608
17	세종	2,846

순위	종합쇼핑몰	
	지역	업체수
1	경기	3,253
2	서울	1,365
3	경북	808
…		
7	충남	597
8	충북	537
13	대전	319
17	세종	79

- 이번 분석과 관련하여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http://bddm.g2b.go.kr)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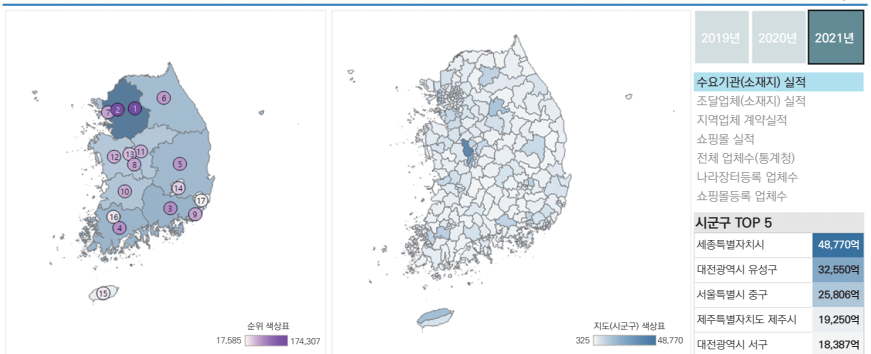
-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데이터 시각화서비스를 통해 조달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들이 조달데이터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참고 '지역별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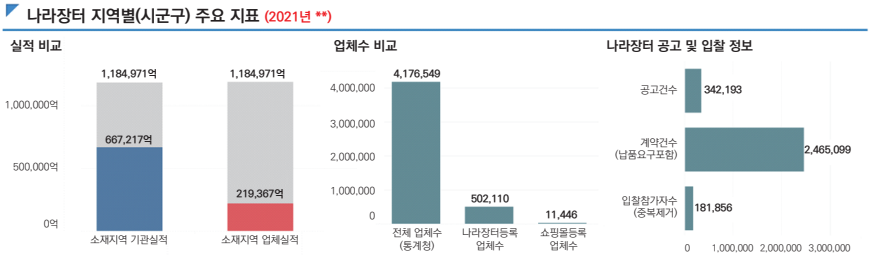
1. 전국 기준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현황 (2021년 ** 수요기관(소재지) 실적)

* 조회할 지역을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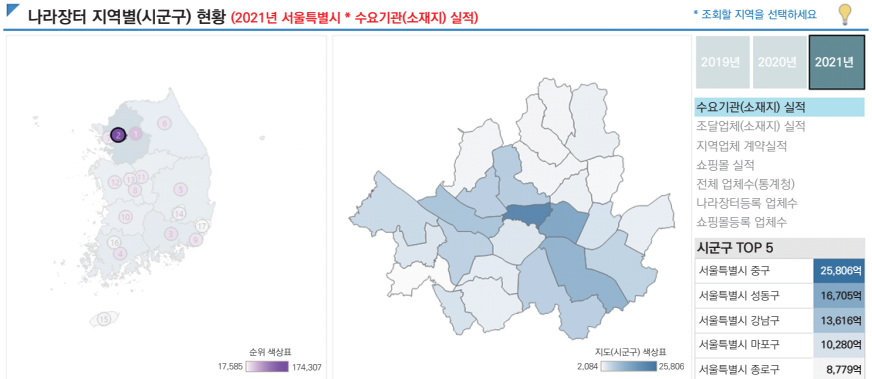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주요 지표 (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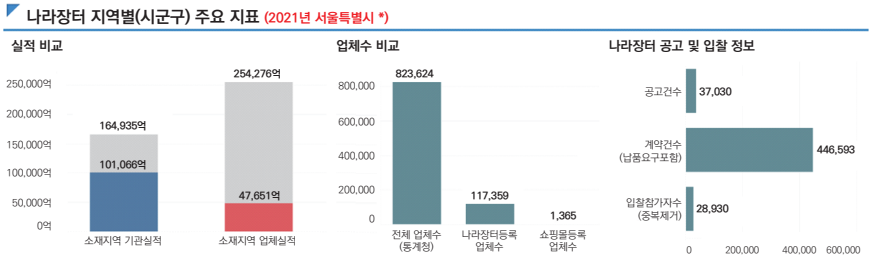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기준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현황 (2021년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소재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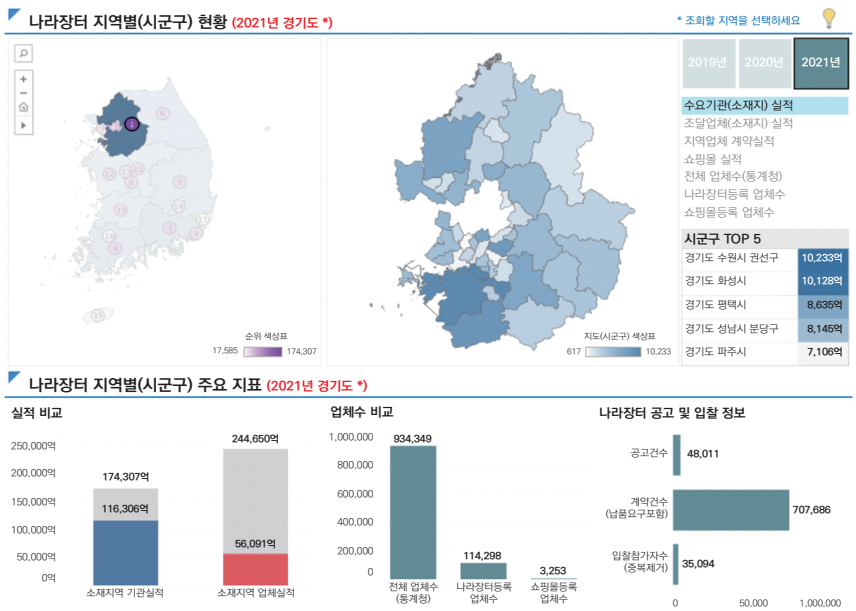
* 조회할 지역을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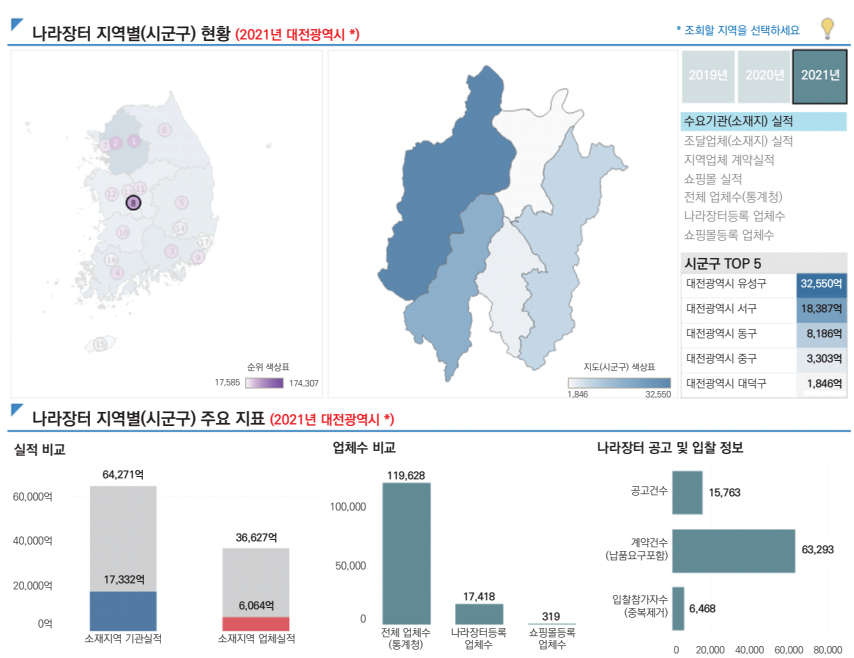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주요 지표 (2021년 서울특별시 *)



3. 경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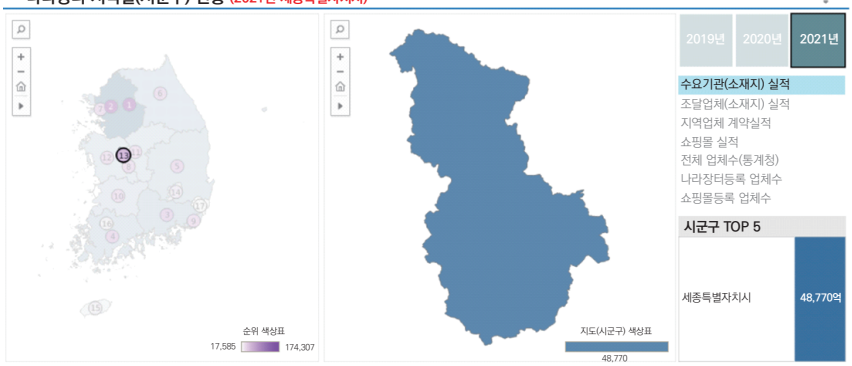
4. 대전광역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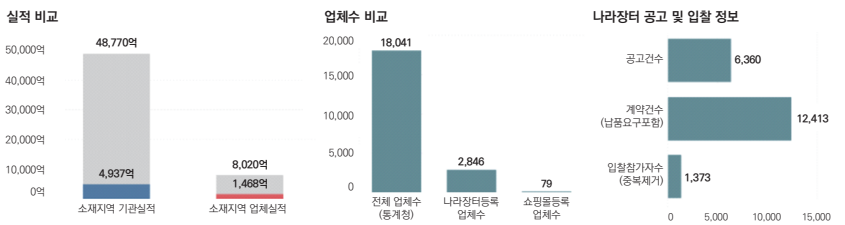
5.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현황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할 지역을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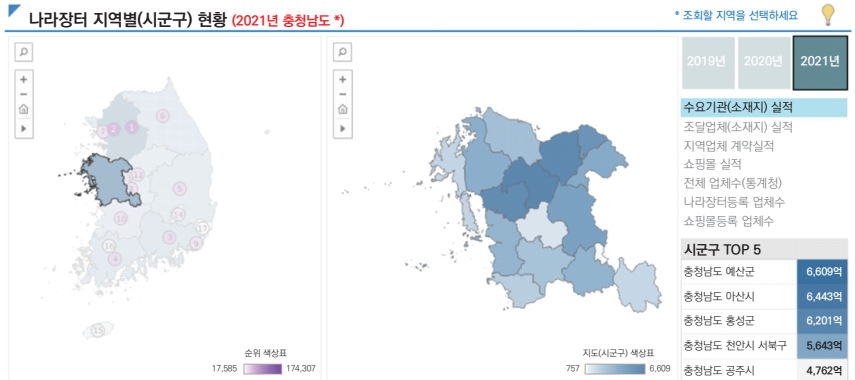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주요 지표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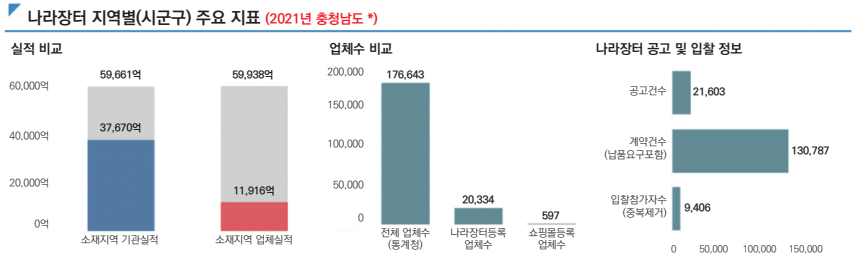
6. 충청남도 기준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현황 (2021년 충청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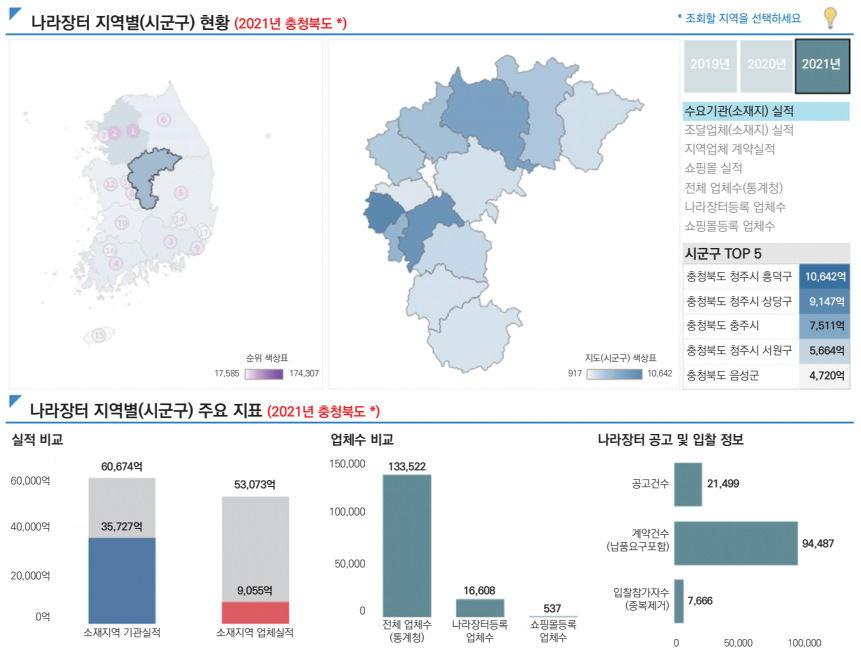
* 조회할 지역을 선택하세요



나라장터 지역별(시군구) 주요 지표 (2021년 충청남도 *)



7. 충청북도 기준



참고자료

조달청 보도자료,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 서비스 제공」, 2022. 2. 16.

조달청 보도자료, 「경기도 나라장터 17.4조원 계약 …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2022. 3. 10

조달청 보도자료, 「2021년 충청지역 소재 기관 23.3조원, 업체 15.8조원 계약」, 2022. 3. 23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2. 국외 동향

녹색 공공조달을 위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 2022. 1., 세계경제포럼(WEF) –

〈보고서 추천 배경〉

- ◆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과 함께 정부의 녹색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 제로 경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난 2022년 1월에 발표하였음
- ◆ 본 보고서는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산업별 공공조달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소개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요인과 직면한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본 보고서를 소개함

□ 세계경제포럼(WEF)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정부의 녹색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 제로 경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2022. 1.)

1. 공공조달 활동과 탄소 제로 경제

□ 정부의 공공조달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GSG) 배출의 15%*와 2도 이하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전기 등 조달 기업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은 1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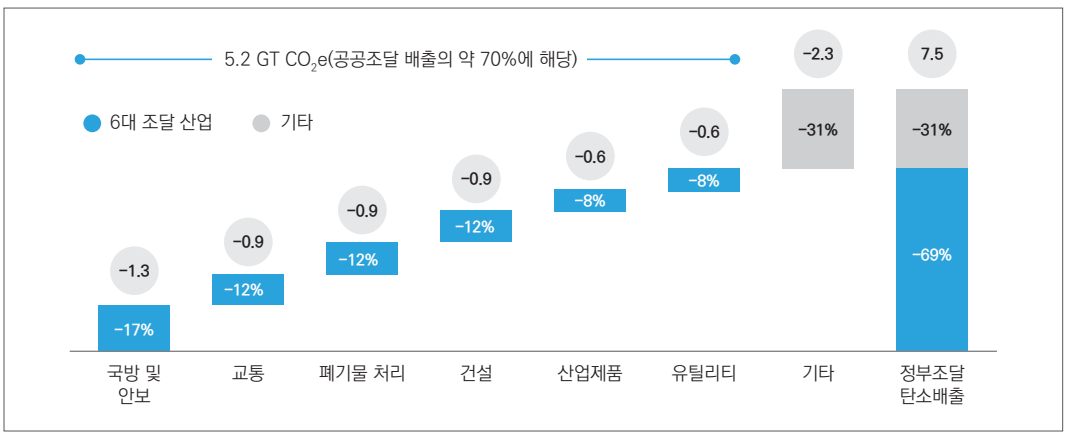
- 2021년 11월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매년 11조달러(약 1경 3천조원)를 정부 조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조달 활동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많은 국가가 공공조달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고 중임

2. 녹색 공공조달 추진의 기회 요인

- 녹색 공공조달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녹색 경제 촉진과 사회적 탄소 비용 감소, 모범적인 정책을 선보여 민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회 요인임
  -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75억톤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중 최대 75%가 국방 및 안보, 교통, 폐기물 처리, 건설, 산업 제품, 유틸리티의 여섯 가지 산업부문에 집중

〈6대 공공조달 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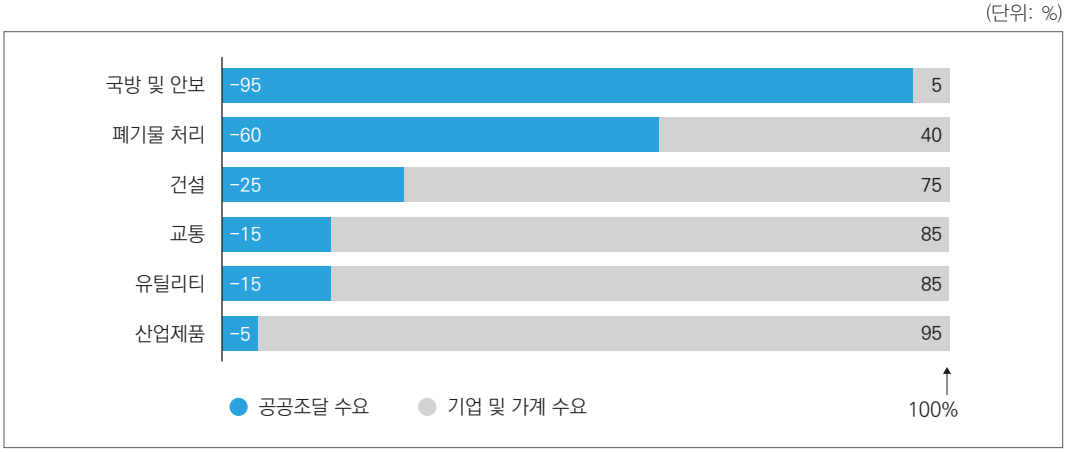
(단위: 억톤, %)



- 국방 및 안보(약 95%), 폐기물 처리(60%), 건설(약 25%) 등의 산업은 전체 매출 중 공공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조달 정책의 영향이 큼

〈산업별 공공조달의 매출 비중〉

(단위: %)



- 녹색 공공조달로 2050년까지 총 6조달러(약 7,200조원)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3. 친환경 녹색 공공조달과 직면한 문제들

- 다만 친환경 공공조달은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임
  -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양은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공공조달 관련 배출량의 약 40%는 CO2e 1톤당 15달러 미만으로 감소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 정부의 노력은 조달 비용을 3%에서 6%까지 증가시킬 것임

- 또 다른 문제로 정부 조달 활동의 고도로 분산된 특성이 직면한 문제임
  -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2019년 공공조달 지출의 절반 미만이 연방 중앙 집중식 수준에서 발생하였음

- 또한 녹색 공공조달의 추가 비용은 보건 및 교육과 같은 다른 정부 부처 우선순위와 자금 조달을 위해 경쟁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배출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 기준선을 설정하고 탈탄소 목표를 정의하며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려움

- 이에 녹색 공공조달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는 첫 번째 비용, 두 번째 복잡성, 세 번째 경쟁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마지막으로 데이터 투명성의 과제를 극복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1) 비용: 공공조달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략 40% 정도는 1톤당 15달러(약 1만 8천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달 비용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복잡성: 국가 전체 조달예산 중 중앙 정부의 비중이 12%에 불과한 캐나다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 조달 정책은 분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조달 활동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비효율성을 초래함
  - 3)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녹색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정책 부문과의 재정적 균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4) 데이터 투명성: 녹색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4. 녹색 공공조달 추진을 위한 방안

- 공공조달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10단계의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미래 목표 기준의 설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 향상, 기후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최적화, 공급업체와의 협력,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 조달 조직에 해당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1단계와 2단계: 기준선과 목표를 투명하게 만들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금속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경제적 가치에 따라 노력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공통 지표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함

3단계 및 4단계: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제품을 최적화하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줄여야 하는 배출 감소 레버를 설명하는 저감 로드맵을 개발하고, 비용, 영향 및 실행 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함

5단계와 6단계: 제품 및 공급업체 표준을 정의하고 공급업체를 참여시키기
내부 운영 및 외부 공급업체 모두에 대한 조달 표준을 설정한 다음, 배출 목표 설정 및 달성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함

7단계와 8단계: 더 넓은 생태계를 개발하고 구매 그룹을 만들기
업계 연합과 협력하여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회사 및 재료를 인증하고, 구매 그룹에 가입하여 저탄소 제품 시장을 만들 수 있음

9단계와 10단계: 조달 조직을 혁신하고 여러 기관을 조정하기
조정 모델, 개별 책임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재정렬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

- 이렇듯 순수한 규모와 지출 능력을 감안할 때, 공공조달은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이에 모든 공공조달 공무원이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지금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본 보고서를 통해 제안함

참고자료

World Economic Forum in collaboration with Boston Consulting Group, “Green Public Procurement: Catalysing the Net-Zero Economy, January 2022,” https://www3.weforum.org/docs/WEF_Green_Public_Procurement_2022.pdf, 검색일자: 2022. 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주요동향, 「WEF,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2022. 1. 12.,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5301&menuNo=200004&searchCate=&searchNate=&searchSubj=&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3%B5%EA%B3%B5&pageUnit=10&pageIndex=1, 검색일자: 2022. 5. 4.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2021. 3., 영국 정부(HM Government) –

〈보고서 추천 배경〉

- ◆ 영국은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방 분야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 본 전략 보고서는 영국 정부와 국방 및 안보 산업 간의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조달 입법 개혁, 정책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제안함

-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및 안보 산업을 갖추고 있음. 이는 국가 안보의 토대가 되어 일자리, 기술, 연구 개발,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밑거름이 됨
  - 특히 영국은 세계 최대의 방위 산업 수출국 중 하나로서 국방 분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 사용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더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정부와 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활용해야 함
  - 따라서 영국은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국방 조달 및 단일 공급자 계약(Single Source Contract) 규정을 개혁하여 조달의 속도와 생산성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와 협력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새로운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임
  - 본 연구동향은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 보고서에서 조달 정책 개정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함

Ⅰ. 국방 및 안보 산업 정책과 조달 정책

- 국방 및 안보 산업 정책과 조달 정책은 영국 국방의 요구사항과 시장 상황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전반적인 조달 정책을 개정하고 안보 관련 부처의 개혁 및 진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1. 정부와 산업 부문의 협력

-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가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조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임
  - 이를 통해 정부는 국방 및 안보 부처의 조달방식을 개혁할 계획이며, 정책, 절차, 입법 등에 대해 일괄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임
    - 이러한 변화는 조달시장과 협력하여 전문화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조달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단순화하여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개선에 대한 절차와 기간을 축소시킴
      - 둘째, 각 조달 기능의 요구사항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함
      - 셋째, 조달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급업체의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조달 기능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부처는 조달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행할 예정임

2.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및 단일 공급자 계약 규정(Single Source Contracts Regulations) 개혁

- 영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을 탈퇴함으로써 EU 지침에서 파생된 2011년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의 국방 및 민감한 안보 조달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달 규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조달 절차의 가속화 및 단순화를 목표로 공공조달 혁신에 관한 녹서(Green Paper)를 발표함

- 이를 통해 영국은 조달 절차 및 속도를 개선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며,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도입하도록 할 계획임

- 녹서는 공공계약 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과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의 규칙들을 명확히 정리하여, 하나의 통일된 단일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체제 간소화, 계약 절차 간소화, 정부 목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 공급자 계약 규정(Single Source Contracts Regulations)에 대한 개혁을 검토 중임

- 단일 공급자 계약 규정(Single Source Contracts Regulations)은 업체가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수익률을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수립될 것이며, 조달의 위험요소 및 시장 상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단일 공급자 계약의 이익을 통해 세계적인 성과와 혁신을 장려한다면, 영국 방위 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 또한 공급업체가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며,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계획임
    - 더불어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 자금조달과 같이 새로운 계약 방법에 맞추어 규정을 조정할 것임
  - 국방부는 단일 공급자 계약 규정(Single Source Contracts Regulations)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이를 이행하는 입법 및 기타 매커니즘에 관한 칙령서(Command Paper)를 올해 말 발행할 예정임

3. 공공조달 개혁

-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공조달 개혁을 통해 달성된 사항들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임
  - 상품군 관리(Category Management)
    - 국방부는 국방 전반에 걸친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상품군 관리를 초기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또한 방위 전문 지식과 수요를 활용하고 통합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더 나은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을 창출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방부는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주요 공급업체와 거래 시 통일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영국이 산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할 것임

- 기술 개발(Technology Exploitation)
  - 국방부의 조달 절차 속도를 개선하여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는 이를 위해 개발 및 조달 절차에 협력업체를 참여시켜 혁신과 신기술의 활용을 보장하고, 조달의 최종 사양(specification)과 요구사항 개발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임
-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
  - 조달의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관련 부서 팀 내 문화와 행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 상업적 기능의 역량 향상 지속(Continuing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the commercial function)
  - 국방 및 안보 부처는 상업적 기능의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계속해서 투자할 예정임

4. 국방부-산업 연계

- 국방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포럼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이를 강화할 수 있음
  - 첫째, 정부 간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우선순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함
  - 둘째,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링 프로그램(MOD Strategic Partnering Programme, 이하 SPP)의 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공급업체와 함께 조달 전략 이행을 지원함
    - SPP는 상호 이익 창출, 영국 사회 가치 향상, 그리고 경제적 번영 뒷받침을 목표로 함
  -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춤
    - 국방부는 중소기업이 국방조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활동을 검토했으며, 중소기업의 조달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넷째, 전략적 주제에 대한 국방부-산업 연계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국방 공급업체 포럼(Defence Suppliers Forum, 이하 DSF)을 강화함
    - DSF는 국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고, 국방 및 안보 산업이 영국의 경제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다섯째, 국방부는 산업계와 함께 수출 및 경제성장에 관한 방위 성장 파트너십(Defence Growth Partnership)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 파트너십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II. 조달 파트너십 및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

1. 기타(non-MOD)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국가 안보 조달

- 영국 정부의 비군사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층(customer base)은 여러 부처 및 기관 그리고 넓은 공공분야에 걸쳐 있음
  - 안보(security) 관련 물품 및 서비스의 고객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고, 방위(defence) 부문은 정부가 주요 고객임
    - 따라서 산업계에 각각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안보 부문 내 중소기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산업계가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정부와 협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안보 시장은 대게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정부가 주요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위 시장과 비교할 때 지원 및 개입이 덜 필요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부와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음
    - 첫째, 초기 연구에서부터 상용화 및 활용에 이르는 로드맵 개발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투명성 향상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 필요
    - 둘째, 개별 요구사항의 해결책 발굴에 대한 산업계의 초기 참여 필요
    - 셋째, '국방 및 안보 가속팀(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 이하 DASA)'을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혁신 과제 시행 필요
    - 넷째, 안보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필요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안보, 산업계, 학계 및 정부 간의 전략적 협업을 위해 기존의 안보 및 회복 성장 파트너십(Security and Resilience Growth Partnership)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2. 장기적인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 보장 및 산업적 결과 고려

- 정부는 조달을 통해 최고의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을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 2020년 11월 개정된 영국 재무부의 그린북(HMT Green Book)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모든 조달은 조달이 진행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즉,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으로 정부 투자 전반에 걸쳐 평가되는 요인임

-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 다양한 요소가 전략,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국방 및 안보 조달에서 이는 국가 안보 요건(장비의 최소 성능 조건 등)을 기반으로 함
- 잠재적 비용 효용성(potential value for money): 비용 효용성은 전 생애 비용(whole-life costs)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사용 가능한 해군함(naval ships)의 경우, 이를 유지 및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초기 구입비용과 비슷할 수 있음

■ 비용 효용성 평가(value for money assessment)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 및 편익은 조달 주체 정부의 재정적 비용 및 직접적 편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비용과 편익을 포함해야 함

- 그러나 모든 사회적 가치가 각 조달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따라서 정부가 산업계를 포함하여 더 큰 정책 목표에 대해 다양한 조달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적 가치에 뒷받침되는 많은 분야는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사업, 일자리 및 기술을 창출함

■ 평가 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는 조달 전략 개발 초기에 설정되어야 함.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공급업체의 능력 및 역량(Supplier capacity and capability): 이는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서 공급업체가 조달 요구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물론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회복력 있고 생산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 요인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잠재적 성취 가능성(Potential achievability): 고객이 예상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려함
- 잠재적 부담 가능성(Potential affordability): 이는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과는 별개의 요소임. 조달 프로젝트를 예산 내에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초기 입찰 시 예상했던 비용이 향후 개발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Ⅲ. 전략적 목표 설정 및 데이터 수집

- 조달 프로젝트의 전략적 목표 수립은 조달 및 상업적 전략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요함

1. 전략적 목표와 기대 결과

- 국방부는 중요한 전략을 결정하고, 의사 결정자에게 가시성 및 기회를 주기 위해 '전략적 개요 사례(Strategic Outline Cases)'를 전파함
  - 전략의 도입은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을 충족하기 위한 성공 요인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

- R&D 조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능력을 창출하고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R&D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조달 전략을 수립할 때 프로그램의 산출물 또는 결과가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고위 책임자(Senior Responsible Owner, 이하 SRO)는 조달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닌 책임자임
  - 조달 목표는 전략적 개요 사례(Strategic Outline Cases) 조사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국방부는 조달 요구사항 및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음
  - 군용 장비에 대한 가장 큰 우선순위의 사회적 목표는 새로운 사업, 기술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망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확대시키며 혁신을 촉진하는 것임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관 설립

- 데이터는 구매자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양적 및 질적 평가에서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함
  - 이러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국방 부문 전반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동 경제 데이터 허브(Joint Economics Data Hub, 이하 JEDHub)'를 설립함
    - JEDHub의 설립 및 사회적 가치 모델의 도입과 함께 사회적 가치 편익에 대한 추가 정보가 조달 과정의 일부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참고자료

HM Government, *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trategy: A strategic approach to the UK's 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ectors*,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fence-and-security-industrial-strategy, 검색일자: 2022. 4. 13.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국방 분야 중소기업 시행 계획

– 2022. 1.,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보고서 추천 배경〉

- ◆ 영국은 앞서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DSIS)을 통해 국방 조달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이 비전을 달성하고자 함
- ◆ 본 시행 계획은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DSIS)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영국 국방 및 안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고, 더 나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줌

- 국방 및 안보 산업 전략(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trategy, 이하 DSIS)에서 영국은 경쟁적이고,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국방 조달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또한 중소기업이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서 영국 4개국[9]에 걸쳐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함
  - 따라서 본 시행 계획에서 국방부는 중소기업과의 연계 강화, 국방부와 주요 공급업체의 역할 정립, 그리고 공급업체의 혁신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
  - 계획의 주요 목표는 중소기업이 영국 국방 및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 본 시행 계획은 DSIS,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 국방지시서(또는 칙령서, Defence Command Paper)에 명시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하며, 국방 공급업체가 기회를 찾고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함
  - 국방부 및 주요 계약업체는 시행 계획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영국의 국방 공급망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의미함

Ⅰ. 국방부의 조달 활동

- 영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술적인 조달을 관리하며, 조달을 통해 군 전투 차량에서부터 교육 서비스, 핵 잠수함,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구입함

- 2019년 발표한 첫 번째 중소기업 시행 계획(SME Action Plan) 이후,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이룸
  - 새로운 국방 공급업체 포럼 워킹그룹(Defence Suppliers Forum SME Working Group) 설립
  - 기존 및 새로운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무역 협회(Defence focused Trade Associations)와 정기회의 개최
  - 계약자 책임 제한(Limits of Contractor Liability)에 대한 방식을 변경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접근성 향상
  - 공급업체가 국방 조달 포털에 하도급 계약 기회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가시성 향상

- 국방부는 이러한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영국의 안보 및 이익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역량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영국은 납세자들을 위한 최고의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국방부의 조달 활동은 다음과 같은 넓고 다양한 사항을 포함함
  - 기술: 클라우드 및 디지털, 네트워크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제품
  - 장비 및 지원: 선박, 잠수함, 항공기, 차량, 무기, 미사일, 상품 및 지원(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등)
  - 인프라: 건축, 시설 관리, 건물 컨설팅
  -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전문적인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Ⅱ. 국방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

- 중소기업은 국방부의 조달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Ⅱ장은 중소기업이 영국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공유함

1. 국방 및 안보 가속팀(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의 혁신 지원

- 지난 3년 동안 국방 및 안보 가속팀(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 이하 DASA)은 산업계 및 학계와 함께 1억 300만파운드 이상을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이 중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함
  - 혁신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체르부스 방어(Cervus Defence)
      - 훈련 및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주도 혁신 방어 시스템으로서 케냐의 낙하산 연대(Parachute Regiment)에 시범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사격 정확도가 향상됨
    - 옥스포드 우주 시스템(Oxford Space Systems)
      - 국방부는 옥스퍼드 우주 시스템의 일환으로 새로운 인공위성 안테나에 100만파운드를 투자했으며, 새로운 안테나는 현재 상용화된 안테나보다 가볍고 가성비가 좋음
    - 심센트릭(SimCentric)
      - 이는 혁신을 통해 교육, 안전 및 군사 작전 등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베테랑이 운영하는 기술 회사임
      - 2020년 DASA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훈련을 위해 심센트릭(SimCentric)에 30만파운드를 투자함
      - 이를 위해 낙하산 연대(Parachute Regiment), RAF 연대, 그리고 해병대가 함께 시범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을 통해 가상현실 기술이 영국 국방부의 훈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입증함

2. 공급망을 통한 참여

- 아테크 엔지니어링 솔루션(Atec Engineering Solutions)은 영국에 본사를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제품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 현재 아테크(Atec)는 국방부의 치누크 함대(Chinook fleet)를 지원하기 위해 보잉(Boeing Defence UK)과 장기 계약을 체결함
  - 아테크(Atec)의 회장은 방어 분야와 주요 계약업체의 요구를 파악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함

3. 주요 계약업체들과의 연계

- 조달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방 공급망을 관리하는 주요 계약업체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함
  - 국방부는 주요 계약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공급업체가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사항을 이행하는 데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Ⅲ. 시행 계획(Action Plan)

- 제Ⅲ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약 이행 및 DSIS의 목표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 분야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룸
  - 본 시행 계획은 중소기업의 우선순위 및 영국 방위산업의 장애물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계획은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될 것임

1. 새로운 국방 공급업체 포럼 도입

- DSIS에서 국방부는 중소기업이 영국 국방 분야의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방 공급업체 포럼을 강화하기로 함
  -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 공급업체 포럼 중소기업 워킹 그룹(Defence Suppliers Forum SME Working Group, 이하 DSF SME Working Group)을 설립함
    - DSF SME Working Group은 정부, 중소기업, 주요 계약업체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짐
    - 또한 조달 절차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위해 국방 업무와 관련된 간접비를 줄이는 등 조달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임

- 국방부의 목표는 DSF SME Working Group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변화 및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방부는 DSF SME Working Group의 회원 업체들에 가장 시급하고 걱정되는 문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함
  - 또한 국방부는 중소기업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포럼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럼 회원의 대다수를 중소기업으로 구성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정한 문

제점 및 관심사가 해결책에 반영될 수 있음

- 〈표 Ⅲ-1〉은 포럼 회원들이 작성한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나타냄

〈표 Ⅲ-1〉 중소기업의 우선순위 및 대처 방안

우선순위	대처 방안
프레임워크의 가시성 향상	- 중소기업의 참여 및 프레임워크의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위한 방안 및 조치 파악 - 국방 분야 및 정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로드맵 개발 - 영국 정부가 맡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Framework Library)를 개발하여 주요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 사례를 통해 배우고 개선해야 할 영역 도출
국방 공급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기회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 향상	- 국방 무역 협회 조정 위원회(Defence Trade Association Alignment Council)를 통해 무역 협회의 협력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개발 - 중소기업의 역할을 알리고 방위산업 물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 개발
국방부와 중소기업의 연계 및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이해 방안 개발	- 중소기업 연계에 관한 기타 방안 개발 - 정책 효과성 모니터링을 돕는 대시보드(dashboard)로서의 데이터 활용 방안 고려 -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s)의 중소기업 국방 분야 활동 파악을 위한 연례 설문조사 실시

자료: MOD, "The Defenc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Action Plan," 2022, pp. 10~11 표 재인용

- 대처 방안은 정부, 중소기업,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s), 주요 공급업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DSF SME Working Group에 보고 및 논의해야 함

2.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산업

- 국방부는 전체 국방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영국 공급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함
  - 첫째, 전략적 파트너링 프로그램(Strategic Partnering Programme, SPP)을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국방 공급망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다양성,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장려함
    - 또한 공급망의 세계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공급업체의 활동 변화를 유도함
  - 둘째, 영국 공급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된 산업 참여 정책을 도입하고자 함
    - 이 정책은 공급업체들이 조달에 대한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조달 활동 계획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될 것임

- 셋째, 국방부는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국 국방 분야를 위해 더 큰 정부 투자를 활용하여 국방 공급망 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Defence Supply Chain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gramme)을 설립할 것임
  - 이 프로그램은 더 큰 중간급(mid-tier)의 방위산업체를 개발하고 영국 전역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넷째, 국방 기술 개발 프로그램(Defence Technology Exploitation Programme, 이하 DTEP)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국가 항공 우주 기술 개발 프로그램(National Aerospace Technology Exploitation Programme, 이하 NATEP)을 기반으로 영국 전역에 DTEP를 설립할 것임
  - DTEP는 상위급(higher tier) 업체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조달하는 데 있어 국방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또한 영국의 중소기업과 상위급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에 부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고 국방부의 장비 능력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임

3. 조달 정책

- 방위 산업 조달의 규모와 복잡성은 예비 공급업체, 특히 국방부와 처음으로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간단하고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조달을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 중임

- 현 시대에는 조달 절차의 속도, 효율성 및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조달 절차가 필요함
  - 국방부는 프로그램 팀(programme teams)이 중소기업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공급업체들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공급업체에 조달 경쟁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영국의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는 국방 및 안보 공공계약 규정 2011(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1, 이하 DSPCR)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임

-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정책 공약 이행 및 중소기업 혜택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첫째, 국방부는 공공조달 규정(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에 대한 정부 검토의 일환으로 DSPCR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 국무조정실은 조달 절차를 가속화 및 단순화하고, 비용 효용성(value for money)을 달성

하기 위해 공공조달 개혁에 관한 녹서를 발간함

-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달 속도와 민첩성을 개선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고, 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기술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2021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자문에 대한 답변(Government Response to the Public Consultation on 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DSPCR을 포함한 네 가지 규정들을 단순한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자 함
- 중소기업은 규정의 단일화, 조달 절차의 가속화 및 단순화, 신기술 활용에 대한 유연성 향상 등을 장려하는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방부는 또한 단일 공급자 계약 규정(Single Source Contract Regulations)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으며, 관련하여 제도 간소화 및 계약 절차 가속화 등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제시된 방안은 수익 계산 절차 단계 축소, 보고 요건(reporting requirements) 축소,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함
- 규정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은 칙령서(Command Paper)를 통해 발표될 것임

● 셋째, 국방부는 부처가 입찰업체에 법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자 책임 제한(limitation of contractor's liability)에 대해 새롭게 개정된 정책을 발표함

- 지금까지 부처의 이러한 경향은 중소업체가 국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새롭게 개정된 정책은 중소기업의 활동 장벽을 많이 제거함

● 넷째, 국방 분야는 상업적 역량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 국방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DSIS의 전달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업적 전문 지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4. 기술 및 기술개발 유인정책(Pull Through)

■ 국방부는 혁신적인 기업을 장려하고, 국방 공급망의 모든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새롭고 참신한 공급업체를 유치하고자 함

● 국방부의 고객업체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향후 국방 조달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술은 영국의 안보 및 번영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혁신은 군사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임

- 혁신 및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첫째, 공동 창조(co-creation) 및 공동 투자를 위한 기회를 파악함
    - 국방부는 영국 남서부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역 방어 및 안보 클러스터(Regional Defence and Security Clusters, 이하 RDSCs)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하면서 산업 및 지역 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이하 LEPs)을 지원하고 있음
    - 국방부 및 산업을 위한 국방 공급업체 포럼 혁신 운영 모델(Defence Supplier Forum Innovation Operating Model) 시행의 일부로서 이러한 클러스터는 산업과 정부가 아이디어와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 및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클러스터는 새롭고 참신한 중소기업이 국방부의 공급업체 및 Tier 1(상위급)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
  - 둘째, 조달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조달 절차의 속도를 개선함
    - 국방부는 신속한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달 및 승인 접근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정된 방법을 테스트 중임
  - 셋째, DASA는 혁신적인 국방 및 안보 기능을 통해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기반(supplier base)을 더욱 넓히고자 함
    - DASA는 부문별 경쟁(Themed Competitions)과 혁신을 위한 공개 모집(Open Call for Innovation)이라는 두 가지 주요 매커니즘을 통해 혁신을 지원함
      - 부문별 경쟁(Themed Competitions)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혁신업체(innovators)가 특정 관심 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혁신을 위한 공개 모집(Open Call for Innovation)은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업체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혁신업체는 아무 때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평가하고 계약을 진행함
  - 넷째, DASA는 새로운 국방 자금 조달 경쟁인 국방 혁신 대출(Defence Innovation Loan)을 시작했으며, 현재 혁신적인 국방 솔루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천만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음
    - 혁신적인 국방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연간 7.4%의 금리로 국방 혁신 대출(Defence Innovation Loan)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DASA와 이노베이션 UK(Innovation UK) 간의 고유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며,

국방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 다섯째, DASA의 멘토링 및 재정 접근(Access to Mentoring and Finance, 이하 A2MF) 서비스는 혁신업체가 국가 및 지역 비즈니스 지원, 회사 성장 및 자금 조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됨
  - A2MF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비즈니스 및 창업 지원 기관을 교육하고, 조달 기회에 대해 주식 금융 및 투자자를 교육함
- 여섯째, DASA는 혁신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혁신 표준 계약(Innovation Standard Contract, 이하 ISC)을 사용함
  - 이는 DASA와의 계약을 보다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계약의 조항 및 조건은 각 조달에 따라 조정됨

Ⅳ. 목표 및 보고

- 국방부는 2022년 조달 지출의 25%가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 계획(Action Plan)을 세우고 이행 목표를 제시함
  - 조달 지출의 25%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국무조정실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지출 관련 보고서에 포함되어 함께 발표됨
  - 시행 계획의 특정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은 DSF SME Working Group에서 논의될 것이며, 회원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국방부는 조달 지출이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국방 공급업체 포럼 SME Working Group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개발을 고려하고 있음

- 국방부는 영국 국방의 경제적 분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관되고 공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중임
  - 현재 정부, 산업계 및 학계가 협력하여 공동 경제 데이터 허브(Joint Economic Data Hub, 이하 JEDHub)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게시된 데이터 및 주요 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 및 국방 중심 무역 협회 등과 협력하여 JEDHub의 점진적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참고자료

MOD, *Opportunity & Innovation: The Defenc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Action Plan*,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portunity-and-innovation-the-defence-small-and-medium-sized-enterprise-action-plan, 검색일자: 2022. 4. 13.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 편 집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편집총괄)
임소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강경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변이슬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소준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아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응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형석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2년 여름(Vol. 9 No. 2) |

2022년 6월 27일 인쇄
2022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표), http://www.kipf.re.kr
등 록 세종, 바00027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SN 2635-712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